

Special Report

제21대 대통령선거 : 그 결과와 영향

June 4, 2025

■
I. 대선 결과 요약

II. 향후 주요 일정 전망

III. 새 정부 공약 분석 및 시사점

목 차

*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I. 대선 결과 요약	3
-------------------	---

II. 향후 주요 일정 전망	3
-----------------------	---

III. 새 정부 공약 분석 및 시사점	7
-----------------------------	---

[총론: 새 정부 정책 기조]

[분야별 주요 공약 분석 및 시사점]

1. 공정거래	9
2. 교통/모빌리티	15
3. 국토/건설/인프라	21
4. 금융/가상자산	28
5. 기업지배구조	41
6. 노동/중대재해	45
7. 문화예술/관광/게임/방송미디어	55
8. 보건/의료/제약/바이오	64
9. 에너지	73
10. 정보통신/과학기술(AI/데이터/개인정보/정보보호/신사업플랫폼)	77
11. 조세	92
12. 형사/사법	95
13. 환경/탄소중립	102
14. ESG	107
15. 국제통상	111
16. 소비재/유통	115
17. 지적재산권	118
18. 컴플라이언스	120
19. 방산/국방	122

I. 대선 결과 요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9.42%의 득표율을 기록,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8.27%p, 약 289만표 차로 따돌렸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II. 향후 주요 일정 전망

대통령선거 이후 새 대통령이 확정되면 국가비전과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정부조직을 개편하며,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를 지명하여 내각을 구성하는 등 공식적인 대통령 취임과 정부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일정이 진행됩니다.

통상적인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출범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¹되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제19대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대신 수행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국정 목표와 비전을 정립하고 국정과제 등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설치·운영하여 국정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정과제를 설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참조하여 향후 주요 일정을 전망해보겠습니다.

¹ 공직선거법 제14조(임기개시) ①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국정과제 선정

국정과제는 정부가 임기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선언하고 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하며, 추진 일정을 구체화하여 대내외 신뢰를 제고하고, 정책 간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에 국정과제는 **기업환경 변화와 직결**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10일 출범 후 5월 1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

○ 기능

-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 국가 주요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 그 밖에 대통령의 국정기획에 필요한 사항

○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30인 이내의 위원
-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 존속기한

- 50일의 범위에서 존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5월 22일 출범하여 7월 15일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55일간 국정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하였습니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당 정책위 의장·청와대 정책실장·국무조정실장), 위원 30인 등 당·정·청 관계자와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총 34명으로 구성되었고, 기획·경제1·경제2·사회·정치행정·외교안보 등 6개 분과위원회와 대변인실·행정실로 조직되었습니다. 이외에 국민의 다양한 정책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인수위원회를 별도 조직으로 설치·운영하였습니다. 85개 기관으로부터 290여 회 업무보고를 받았고, 210여 회 이상 공식·비공식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주요 활동 내역]

일자 (2017년)	내 용
5.16.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명
5.22.	현판식 및 제1차 전체회의 개최
5.24.	각 부처 업무보고 시작
5.29.	제2차 전체회의 개최
6. 4.	본격적인 국정과제 수립 절차 돌입한다고 발표
6. 5. ~ 7.10	제3차 ~ 제8차 전체회의 개최 (국정과제 주요 핵심이슈 토의 및 선정)
7.15.	활동 종료
7.19.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

새 정부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가운데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큰 폭의 정부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구축·정비해야 하며, 업계 전체 차원의 대응전략 수립도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새 정부 운영에 관한 밑그림을 보여주는 정부조직 개편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통상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부와 여당 간 당·정 협의를 거쳐 2017년 6월 5일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6월 9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0인이 발의하였고, 여야 간 협의를 거쳐 7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7월 26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하는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은 기업의 경영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진행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 외 대선과정에서 언급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감사원의 국회 이관,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 설치 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 정부도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경우 이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내각 구성

문재인 前 대통령은 취임 당일(2017년 5월 10일) 국무총리 후보자 및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이후 5월 21일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 장관후보자 등을 지명하는 등 순차적으로 내각을 구성하여 **7월 3일 장관후보자 및 청와대 주요 참모진 인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몇몇 후보자 관련 논란과 후보자 교체, 국회 인사청문회 등으로 취임 97일째인 8월 14일 내각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각 지명·임명 일자]

일자 (2017년)	지명 · 임명
5.10.	국무총리·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비서실장, 경호실장
5.21.	기획재정부·외교부 장관후보자,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5.30.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
6.11.	교육부·법무부·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
6.13.	미래창조과학부·통일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
7. 3.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금융위원장·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새 정부도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후보자, 대통령실 참모 등을 순차적으로 지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고, 장관후보지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내각 구성 완료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가 신설되거나 재편되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장관후보자를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III. 새 정부 공약 분석 및 시사점

【총론: 새 정부 정책 기조】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은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어, 향후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훼손된 경제기반을 복구하고 산업구조 전환과 법·제도 개편을 통한 성장동력을 **‘회복’**한 이후, 급변하는 대외환경·저출생·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함으로써, 국민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기본 사회로 나아가는 3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확장재정 기조 아래 민생, 내수 침체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첫 단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판단, 지난 5월 1일 통과된 13조 8,000억원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할 것이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 회복형 재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 최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지역화폐 지원과 같은 내수 기반 회복 수단으로서의 추경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성장 비전은 이번 대선공약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으로, **6대 성장엔진(ABCDEF: AI·바이오·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 등 신산업 집중 육성,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대규모 국민펀드(100조원 규모) 조성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육성**을 지원하며, 글로벌 공급망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핵심 소부장 자립화,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향후 **경제 안보 총괄 컨트롤 타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세제혜택 등의 정부지원책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공급망 위기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체계적인 소통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우는 선제적 사업 재편, 구조 고도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 모두 존중받고 서로 화합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즉 회복과 성장이란 선결 조건이 해결되면 **최종 목표인 보편적 기본 사회**(AI 등 첨단산업 지원으로 초래할 수도 있는 사회적 위기에 대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영역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중도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 지향을 제시하면서도 개혁·분배를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등을 통한 **정책 확정과 집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상기 정책 기조 하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높이는 사전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 정부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출범과 함께 노동·복지·기업규제 등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²로 제동이 걸렸던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지역화폐법, 양곡관리법** 등이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여당의 지원 하에 재추진될 수 있습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의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과의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사회·문화·경제 등의 분야는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온 바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정적 관리를 기본으로 **경제적 협력과 안보적 관점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익 최우선의 실용 외교 방침은 국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접근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² 이전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수는 중복된 것을 포함 총 42건

【 분야별 주요 공약 분석 및 시사점 】

1 공정거래

[Key Point]

-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갑을 문제 개선, 경쟁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수료 상한제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예상
- 경제적 약자 및 중소기업의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해 협상력 강화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과 집행 강화 예상

주요 공약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및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

-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 법제 구축
 -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 도입
 -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 도입
 -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경쟁 촉진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혁신 재창출
 -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 재정비
-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
 -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부처별 산재된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 정비
-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 경제적 책임 강화
 -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 개선
-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으로 앱 마켓 글로벌 형평성 제고
 -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 등
-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다크패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강화

▶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구입 강요, 차별가격 적용 등을 통한 비용 전가 방지
 -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의 단체 등록제와 단체협상권
 - 열위적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상권 부여
-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입법 등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

▶ 중소기업 협상력 제고 및 권익 향상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법제화
-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거래조건 등 단체협상권 부여
- 지역 중소기업 정책에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 확대
-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요금 등 경비를 포함하여 수탁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 납품대금연동제 안착 위해 미연동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
-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 건설사업자 관련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개선 등

▶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한 탈취 방지

-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의 공정위, 중기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 -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피해기업의 법률자문, 소송 지원,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활용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강화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실효성 강화
 - 위·수탁거래 불공정행위 조사, 구제 등 피해구제 강화

▶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 근절

- 소수의 지분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우려 해소
-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 일감 몰아주기 및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점검 강화
- 탈법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시사점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진짜성장”을 위한 3대 전략 중 하나로 ‘공정한 성장’ 전략을 취하면서, 이를 위해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 관련 규제 및 법 집행 방향은 이러한 핵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플랫폼 관련 규제 및 갑을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입점사업자, 중소기업 등 이른바 乙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정책 집행이 ‘진짜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미세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새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5년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 적절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관련 규율 체계 구축:** 새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갑을 문제 개선, 경쟁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법안과 관련한 통상 이슈가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새 정부는 갑을 문제 개선을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과 플랫폼 경쟁촉진 법률 등의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관련 입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갑을 문제 개선과 관련하여, 새 정부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을 도입하고, 특히 배달시장에 있어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단체 등록제 및 단체협상권도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갑을 문제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고, 이미 다수의 플랫폼 공정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인 바, 관련 입법 및 규제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위도 최근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 가동을 통한 적극적인 사건처리(2025. 5. 12. 자 공정위 보도자료 참고), 배달앱 피해 자영업 단체로부터의 의견청취 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과 관련한 새 정부의 정책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제적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 바,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공약사항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에 대비하여, 대상 플랫폼 기업들은 수수료 산정 및 부과 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점업체와의 거래 관계 및 협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위의 조사 및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경쟁촉진과 관련하여, 새 정부는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여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해 혁신을 재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플랫폼 경쟁촉진 법안의 도입 여부, 규제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새 정부는 공약을 통해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플랫폼 경쟁촉진 법안과 관련하여 통상 이슈가 문제될 수 있음에도 새 정부가 입법의지를 보인 만큼 입법이 추진됨은 물론, 이와 별도로 공정위가 법집행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플랫폼 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새 정부는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보안을 통해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는 기존 플랫폼 관련 규제의 한계들로 지적되던 플랫폼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이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효성 확보 이슈에 대해서도 입법적 보안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플랫폼과 관련한 통상 이슈가 존재함에도 새 정부는 여러 플랫폼 관련 법안들에 대한 강한 입법의지를 보이고 있는 바,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인한 리스크를 점검하여 사업 방식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기존 사업 방식의 정당성에 대한 적극적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새 정부는 갑을관계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들이 단체를 등록하고 단체협상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단체 등록 및 단체협상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이 있는바, 새 정부는 이러한 협상력 강화를 대리점주, 플랫폼 입점사업자 등에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당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요청권을 악용해 가맹본부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있다는 점, 복수의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의 업무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제도가 대리점법 및 플랫폼공정화법 등에도 도입될 경우 대상 기업들 역시 가맹본부들과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 기업들은 단체들의 협의 요청에 대응하는 절차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사전에 검토하여 해당 절차들을 표준화하고, 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차원의 내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상권의 남용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경영상 어려움들에 대해, 규제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 협상력 제고 및 권익 향상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새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을 문제 해소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제도들을 새롭게 도입 및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납품대금연동제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에 더하여, 새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단체협상권 부여 및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법제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는 건설 산업의 중요성 및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 관련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자료제출 명령제의 보완,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기금 조성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추가 입법 및 엄격한 법집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과 함께 공정위의 법집행 역시 강화될 수 있는 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들의 민원제기 및 신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규제 리스크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기업들과의 기존 거래관계에 대해 점검하고, 계약 협상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 근절**: 새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공약에 포함하였는 바, 공정위의 기업집단 및 내부거래규제 관련 법 집행 및 정책추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및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익편취 점검을 강화하고, 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언급하였는 바, 공정위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과징금뿐만 아니라 법인 및 개인 고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거래 상대방 선정, 계약조건 협상 및 검토 등 단계별로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 합리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근거자료들을 보존하는 등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공정거래)



최한순 | 변호사

T. 02-316-4707

E. hsochoi@shinkim.com



최중혁(John H. Choi) | 외국변호사

T. 02-316-4232

E. jhchoi@shinkim.com



최재혁 | 변호사

T. 02-316-1734

E. jhyukchoi@shinkim.com



신영호 | 고문

T. 02-316-4649

E. yhshin@shinkim.com

2 교통/모빌리티/물류/운송

[Key Point]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 의무화에 따라 강화된 품질관리 체계 구축, 정부 지침 준수를 위한 대비 필요
- PM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내부 규정 정비 및 수익 모델 조정 등 선제적 대응 필요

주요 공약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물류 환경 조성

- 안전한 전기차 활성화, 배터리 인증제 활성화 및 전기차 화재예방·진압장비 등 도입 확대
-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PM법) 제정
- 택시업계 발전 지원 (택시 준대중교통 인정, 택시호출플랫폼 활성화·공정화 실현, 수요맞춤형 공공형택시 시행지역 및 지원 확대 등)
-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구매시 지원 확대 등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마련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등 화물운송업계 종사자 지원 확대
- 중고차 및 튜닝업계 육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검토
- 농어촌 맞춤형 교통시스템의 도입 및 단계적 확대
-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으로 운행횟수 증차 등 국민편의 확대·안전성 강화

▶ 국토교통 첨단사업 지원 확대

- 국토교통분야의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위한 규제 재설계 및 정부 지원 확대
 - 자율협력주행 조기 상용화 위한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체계 마련
 - 자율주행·스마트도시·4D 지도 등 빅데이터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규제 재검토로 실증화 토대 마련

- K-UAM 상용화 추진 로드맵 현실화 및 공항셔틀·관광·공공을 중심으로 한 실증화 사업 국가지원 확대
- 교통수단 간 네트워크 통합을 통한 물류혁명 구현
 - 드론 등 신교통을 이용한 물류체계 구축

▶ 친환경 교통 전환

- 친환경 대형 수송 모빌리티(전기, 수소 열차 등) 실증화 지원 및 수소연료 보조금 등 지원방안 추진
- 친환경 혁신적 교통·수송 분야 전환 정책 추진
 - 중·저가형 보급형 전기차 및 수소상용차 판매 추진
 - 전기차 화재보험료 및 전기차 안전검사비 한시적 지원 추진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확충 및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 철도지하화 실현

-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추진
- 철도지하화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도사업 대상지 확대

▶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사 및 공항시설에 대한 항공안전투자·정비 등 점검 강화
- 저가항공업계 육성 및 안전관리 기반 조성
- 고부가가치의 부품산업, 정비산업, 공항서비스업 등 육성
- K-공항사업 해외 진출 지원 등 글로벌항공 위상 제고

▶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해 물류 안보 실현

- 핵심에너지 운송에 대한 국적선박 이용률 70% 이상 유지
- 핵심에너지 수송 선사 및 선박의 해외 매각 방지 추진
- 핵심에너지 수송 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 방지

▶ 해양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 해기사 전문 폴리텍 육성 및 해양교육기관을 통한 우수인력 육성
- 한국해기사 직업매력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처우 개선
- 우수 외국인 해기사 훈련·양성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장기체류 지원
-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 1,000명 유지하여 국적해기사 양성체계 구축

▶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

- 북극항로 개발 거점 육성 지원
- 국가 차원의 북극항로 컨트롤타워 및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 강화
- 북극항로 안전 운항을 위한 기술 및 항만 인프라 개발 추진
-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 체제 확립으로 북극항로 활성화 추진
- “부울경 및 동남해안” 북극항로 거점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항만재개발 및 관련 연구기관 등 조성 추진
- 조선해양산업 및 선박 관리 등 항만연관산업(MRO) 특화 지원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 해운 강국 실현

- IMO(국제해사기구)의 친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건조를 위한 국적선사 선박금융 확대
-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 유치
-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내항해운업계 확대 추진
- 친환경 연료 공급선박 설계·실증, 산업수요 연계 등을 통한 친환경 연료(전기, 그린 메탄올, 암모니아 등) 공급망 확대
- 국내-해외 및 국내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신설 및 확대

▶ 섬 주민 교통권 확보 및 섬 관광 활성화

-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섬 주민 교통권 확보로 정주여건 개선

- 연안여객 안전을 위한 해상 전기차 화재 사전 방지, ‘연안여객선 소화설비’ 예산 확대

시사점

●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활성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5년 2월 17일부터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체는 전기차 및 전기차용 배터리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 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자동차 안전규제는 제조사의 자기인증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전기차용 배터리는 화재 등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전 인증체계를 도입한 것입니다. 새 정부의 공약은 이와 같은 기존의 정부 정책 기조와 연결되며, 관련 기업은 품질관리 체계 내실화,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안전한 배터리 생산, 정부의 관련 세부 지침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새로운 규제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PM법 제정을 통한 규제 신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PM법”)’은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온 법안입니다. 지난 국회 회기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급증과 관련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세부조항에 대한 합의 부족으로 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새 정부에서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관련 기업은 PM법 제정에 따른 규제 강화에 사전 대응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기업은 PM법상 주요 조항을 반영한 내부규정 정비, 규제준수 비용을 고려한 수익모델 조정 등을 미리 준비하고, 법안의 입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가속:**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공약은 지난 정부부터 지속되어 온 정책 기조로, 새로운 공약이라기 보다는 기존 정책의 구체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꾸준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통산업 구조가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첨단기술 융합 산업으로 본격 전환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반이 되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 10. 19.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업 및 종사자들은 정부의 미래 모빌리티 로드맵에 맞춰 선제적 기술 투자와 함께 관련 규제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철도지하화’ 사업의 재원 조달방식, 규제완화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약칭: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의 정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부터 공약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철도지하화사업과 그 인근지역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되므로 기업들은 그 기회를 예의주시하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상 다양한 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규제로부터 완화된 기준 적용, 지자체의 비용 보조·융자 등)를 미리 숙지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익성이 다소 부족하여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인센티브 강화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 **항공 안전관리 기반 조성 등 규제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항공 전 분야의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항공산업 관련 공약도 항공안전투자 및 정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러한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합니다. 관련 기업은 최근 제주항공 사고와 항공안전혁신방안 발표 등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에 대비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정부의 대책 추진 이행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략물자 국적선사 적취율 상황:** 국가 전략물자이자 대량화물인 핵심에너지의 국적선 운송비율을 상향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해운기업과, 경쟁력 있는 운임을 확보하고자 국제입찰 등을 선호하는 전략물자 화주들의 입장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국적선 적취율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선화주 협의체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화주에 대한 유인책(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등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북극항로 진출:** 유럽까지의 운송거리가 대폭 단축되는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에 따라 운항선박과 기자재 등의 기술 개발 및 기반시설 투자 등 사전 준비가 바람직합니다. 다만, 북극항로의 물리적 운항여건 성숙, 러시아 등 인접국가의 규제, 항로의 경제성 확보 등 해결과제가 산적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약이행 과정에서의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 **친환경 규제 대응:** 국제적인 친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친환경 운송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 선박금융 확대 등 지원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기업은 국제적 환경규제 추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정부의 정책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관련 전문가(교통/모빌리티/물류/운송)



이지연 (Kelly J. Lee) | 외국변호사

T. 02-316-1674

E. klee@shinkim.com



이혜정 | 변호사

T. 02-316-1719

E. hjelee@shinkim.com



강영일 | 고문

T. 02-316-4043

E. yikang@shinkim.com



지희진 | 고문

T. 02-316-1683

E. hjji@shinkim.com

3 국토/건설/인프라

[Key Point]

- 산업단지 내 주거·문화공간 확대 정책으로 기존 산업시설용지의 용도 전환 통한 새로운 복합 공간 개발 등 다양한 사업 기회가 기대됨
-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으로 새로운 기회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인프라 부담과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심한 계획 수립 필요

주요 공약

▶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으로 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축물 재난안전 인프라 강화
- 반복되는 지하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무장애도시 조성사업 확대

▶ 노후 생산기반 리모델링

- 디지털·탈탄소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산업단지의 스마트그린 산단화 사업 확대
- 산업단지 리모델링과 단지 내 주거·문화공간 확대로 청년 친화적 문화융합산업단지 조성
- 산업 업그레이드 지역 청년 거주환경 개선
- 거점 도시 내 휴·폐업공장 부지 및 도심지역 유휴부지의 고밀도 복합개발을 지원하여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 활용

▶ 건설경기 회복

-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 건설경쟁력 강화로 건설강국 중흥

▶ 농촌재생프로젝트

-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확대, 세컨드하우스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로 워라벨 실현
 - 농촌빈집정비법 제정
 - 마을단위 빈집정비로 마을호텔·카페·청년주택·체험주택 등 지원
 - 농촌 체류형 쉼터,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확대
 - 귀농·귀촌 임대주택 건설, 귀농·귀촌 지원예산 복원 및 확대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

-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
- 신축수요에 방해되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 위한 방안 마련
- 공공성 강화의 원칙 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추진
-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 확립

▶ 5극, 3특 구현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달성

- 5극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 추진
-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추진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운동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 추진

▶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

-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산단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거점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및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 지방성장거점 완성으로 균형발전 완성

- 행정수도 ‘세종’ 완성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역 고밀개발 및 기업본사 이전 유도 위한 규제 완화
- 지역별 도시경쟁력 확보 위해 도시별 랜드마크 활성화 방안 도입
-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 신도시 건설
- 인구소멸위기 지역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

▶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와 수질개선 강력 추진

-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 원상태로 회복
- 낙동강 등 4대강 보 전면개방과 취·양수장 위치개선사업 신속 추진
-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댐 설치 추진 폐기
- 4대강 유입산단폐수(낙동강), 미량유해화학물질과 축산폐수에 먹는물 처리방식(오존, 활성탄)을 적용하여 오염물질 대폭 차단 추진
- 밭에서 유출되는 인, 질소 같은 비점(Non-Point)오염 관리 강화
-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하수처리장 확대 추진
- 녹조발생을 근원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처리제 적용 방법과 마이크로시스틴 기준 마련 추진
- 수질측정센터 4대강 전체로 확대
-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의 수행을 위해 중소형 보, 낙차공, 댐 등 수리구조물에 대한 평가 및 철거·개선 추진
- 하굿둑 개방 통한 생태복원 추진

▶ 1인 가구·청년을 위한 주택정책 확대

- 1인 가구·청년이 살고 싶은 ‘직주근접(직장과 주거가 근접)’, ‘슬세권(슬리퍼+역세권)’, 주거복합 플랫폼주택 확대 조성
- ‘생애 첫 독립’ 1인 가구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주거설계지원 사업 추진
- 원룸·오피스텔 등 ‘깜깜이 관리비’ 방지로 투명성 강화

▶ 대학생·청년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과 상생하는 복합 주거공간 조성

- 대학생·청년 주거안정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주거복합지원센터 공급
- 초·중등 폐교 및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한 행복연합기숙사 공급 확대
- 지역 상생을 위한 주택 활용 기숙사형 청년주택 확대
-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을 통한 기숙사비 인하

▶ 주택 실수요자 지원정책

-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공실폭탄’ 방지 위해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 등 추진
-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주택리츠’ 확대
- ‘안전하고 불편 없는’ 살고 싶은 주택 위해 층간소음·아파트 사전하자 문제 해소
-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해소를 위한 핀셋형 금융지원 확대
-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유도
- 미신고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로 주거안정 보장

▶ 공공임대비율 단계적 확대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 확대
- 쪽방촌 등 주거 취약 계층 해소 위한 대책 마련

▶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

-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 및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 전세사기 예방 위한 관련법 재정비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전세사기 걱정 없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제도’ 개선
- 전세보증금을 주택가격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도입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전월세 부담 완화

▶ 결혼·출생 고민 해결 위한 주택문제 해결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물량 확대

▶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

-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추진
- 6080세대 친화형 녹색건축 및 개조 지원 유니버설 디자인 등 고령자친화형 건축 활성화
-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 구현으로 고령자 거주·균형발전 기반 조성

시사점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국토/건설/인프라 분야에서 고밀도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유희부지 개발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주택 개발,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 정부에서 공공자금 등을 투입하고, 구체적인 정책,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에 따라 건설경기 활성화 등이 기대되기에, 향후 발표되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산업단지 내 주거·문화공간 확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그 용도가 산업용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 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내 유희 산업시설용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주거·문화시설 용도로 변경함으로써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업그레이드하려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밀도 복합개발:** 최근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슬럼화 된 구도심에 교통, 주거, 문화공연, 쇼핑 등 기능이 모두 포함된 시설을 개발하여 구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택 부족 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공약도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노후 산업단지, 도시 내 휴·폐업공장 부지, 유희부지에 고밀도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향후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 지침, 계획 및 후보지 발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주택공급 확대 정책:** 최근 서울시 내 핵심지역의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가격상승 억제를 위한 과도한 규제보다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간소화,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를 통해 핵심지역 내 공급 증대를 유도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분양가 해소를 위하여 분양가 산정 관련한 추가적인 규제를 제시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역세권 주택개발 확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인 가구를 위한 원룸, 1.5룸 규모의 소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주택 공급을 위해 노후화된 역세권의 재개발 사업 활성화,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 및 운영 주체 선정 등에 관한 정책도 함께 추진될 것이 예상됩니다.
- **도심 내 용도변경 등을 통한 청년주거 공급:** 인구구조의 변경, 출생률 감소 등에 따라 초등학교 등의 폐교와 통폐합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남는 학교 부지 등의 활용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기숙사,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가족 형태의 변화,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시니어주택의 개발, 공급은 앞으로 더욱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는 공급되는 시니어주택의 규모도 적고 수요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를 구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시설 공급 뿐 아니라 병원, 여가시설, (방문 가족을 위한)놀이시설이나 숙박시설 등도 함께 필요하며, 건강, 식사, 청소 등 서비스 제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니어주택의 공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전문가(국토/건설/인프라)



장경수 | 변호사

T. 02-316-4066

E. kschang@shinkim.com



양현근 | 변호사

T. 02-316-1738

E. hkyang@shinkim.com



김재정 | 고문

T. 02-316-4506

E. jjkim@shinkim.com



김중한 | 수석전문위원

T. 02-316-4204

E. jhakim@shinkim.com

4-1 금융

[Key Point]

- 소비자 보호, 사고 방지 및 보안 관련 규제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전담할 조직·인력 확충 등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디지털자산, 펫보험 시장 등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 열릴 것으로 예상되나,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리인하, 금융지원 확대 또한 예정돼 있어 금융회사들의 균형적 재무관리 중요성 증대

주요 공약

▶ 민생침해범죄·금융범죄 발본색원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 민생파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 보이스피싱·다중사기범죄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범죄이익 몰수 의무화
- 불법대부업 신고보상금 2배 상향(현재 2천만 원 이하)
- 불법리딩방 등 지능화·복잡화되는 미등록영업·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규율 강화
- 사기의심계좌 지급정지 가이드라인 등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

-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자 등에 대한 엄정처벌 원칙 견지
- 금융보안 확보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 환수하는 보수환수제 도입
- 은행의 단기 실적주의 근절

▶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육성

- 모태펀드 예산 대폭 확대 및 존속기간 연장과 중소기업 AI 스케일업 펀드 조성

- 글로벌 모태펀드 설립을 통한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참여 촉진
-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 연기금 및 연기금투자펀드 등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유도방안 마련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 법인투자자가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시 세액공제 확대
- M&A 촉진 등을 통한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활성화

▶ 딥테크·핀테크 등 혁신분야 유니콘 기업 적극 육성

- (창업단계) 공공기관·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 (성장단계) 기술사업성·역량 등에 기반한 정책보증 지원 강화
- (상장단계) 혁신벤처기업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제도 마련
- (지역투자)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가칭)지역성장펀드 조성
- 중소·벤처기업 금융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금융제도 선진화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재정비
- 혁신금융서비스 확산을 위한 오픈파이낸스(개방형 금융시스템) 활성화 방안 마련

▶ 먹튀·시세조종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상장법인 임직원·주요주주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청구 하도록 의무화
- 사기·횡령·배임 등 상장법인 임원의 중요 전과기록 의무공시 단계적 확대
-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사모펀드(PEF)·투자조합 유한책임투자자(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 검토
-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여 투자자 피해구제 강화

▶ 주식시장 활력 제고

-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적극 추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확대 개편 등 퇴직연금 단계적 대형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 상장 첫날부터 급락하는 공모주 잔혹사 해소
- 코스닥벤처펀드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자금 유입 유도

▶ 청년층의 자산증식 지원 및 금융접근성 제고

-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신설
- 모든 청년이 누구나 무료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도입

▶ 국민에게 신뢰받는 든든한 공적연금

-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미래 연금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는 공적연금 개혁 지속 추진
- 국민연금·기초연금 관계 재구조화, 퇴직연금 공적연금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 정립 등 방안 마련

▶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을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 및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 활성화

▶ 소상공인 금융부담 대폭 감축

-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페널티 축소
-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 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 추진

▶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대폭 감축

-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여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 교육세 부담구조 개편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환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
- 정책모기지 및 정책금융기관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면제 검토

▶ 포용금융 확대 및 취약계층 금융문턱 감축

-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 가입대상 주택가격 요건 완화 등 6080 맞춤형 주택연금제도 확대 추진
- 소외지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 점포 운영
-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자원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한 (가칭)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 금융거래이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의 비금융정보를 적극 반영

▶ 선량한 채무자에 대한 금융 보호 강화

-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추진
- 채무자대리인 범위 확대 검토

▶ 보험가입자 권리 보장

- 본인부담상한제 ‘우선지급-사후정산’을 통한 보험가입자 부담 경감
-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옵션 도입 등을 통한 보험료 부담 경감 추진
- 생명보험·손해보험·독립보험대리점(GA)을 아우르는 통합 상호협정 체결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 유도

▶ 결혼·출생 지원 확대

-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 신혼부부 결혼·출생 지원 확대
 - 신혼부부 결혼·출생 지원금 대출,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감면

시사점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다중피해금융범죄방지법 제정,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범죄이익 몰수 의무화 등 민생관련 금융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 취지와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쉽게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관련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성 강화, 편면적 구속력제도 도입 검토, 회계기본법 제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및 제도의 근본적 변경까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정책변화에 대비하여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예방, 민원 대응 및 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란 은행의 계좌 정보 및 결제 기능 개방에 초점을 맞춘 오픈뱅킹 개념을 넘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로까지 확장되는 포괄적인 진화를 의미합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오픈뱅킹이 금융데이터와 결합하며 고도화되는 과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금융위원회 또한 오픈 파이낸스에 대한 비전을 여러 차례 제시해 온 바 있습니다. 오픈뱅킹의 성공적 안착은 국내 금융 혁신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며, 이는 오픈 파이낸스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새 정부는 오픈 파이낸스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금융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금융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이 여전히 전업주의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금융 인프라에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고, 금융상품 유통구조 및 규제 환경의 제약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여건은 오히려 오픈 파이낸스 정책이 가져올 변화의 폭과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부가 오픈 파이낸스 시대의 개막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만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협업과 혁신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추진 로드맵과 후속 실행계획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오픈 파이낸스는 금융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편익 증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사고에 대한 엄정처벌:**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책임을 묻는 등 금융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검사·제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핵심성과지표(KPI) 합리화와 같은 금융회사 내부 평가제도 개선까지 폭넓게 포괄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는 핵심성과지표를 포함한 인센티브가 단기 실적주의와 금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등 내부 평가제도에 대하여 세심하게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도한 수익성 추구를 견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2014년 발생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망 분리 규제를 비롯한 강도 높은 금융보안 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업권 내에서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보안 체계의 실질적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왔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금융보안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사후책임 강화를 통해 보안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보안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간 금융보안 규제를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되, 이에 상응하는 사후적 책임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흐름은 금융보안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 2025년 초까지 기존의 규칙(Rule) 중심 금융보안 규제 체계를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은 자율적 보안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각 금융기관이 보다 책임 있는 보안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은 단순한 규정 준수 여부를 넘어, 보안 리스크의 실질적 관리와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 정비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벤처투자시장 육성:** 벤처기업 투자 확대, BDC 도입, M&A 활성화, 지식재산권 기반 보증 강화 등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기업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를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기관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 등 자금지원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혁신분야 유니콘 기업 적극 육성:** 새 정부는 민간 매칭형태의 재간접펀드로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자산운용사에게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용·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장기자금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지식재산(IP) 기반 보증 및 유동화보증(P-CBO) 등 연계를 지원할 계획인 바, 금융기관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자금대여시 정책보증을 통해 신용위험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혁신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특성을 반영한 기술가치평가 및 상장심사방안이 마련되면 상장을 통한 투자회사의 수익기회가 증대되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대한 제재 강화,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취지와 방향성에 대한 정당간 이견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관련 제도 개선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 페어펀드는, 미국 SEC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위법 행위자에게 부당한 부당이득 환수금(disgorgement)과 민사제재금(civil penalties)을 모아 자금을 조성하고 해당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는 제도를 모티브로 하는 것으로서, 동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불공정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형 공정기금 도입을 위해서는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므로, 공정기금 자원 조달방식, 피해 보상 대상, 피해규모의 산정방식, 보상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화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식시장 활력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과 함께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코스닥벤처펀드 업그레이드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경우, 그 동안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 공시 콘텐츠 확대,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개설 요건 완화 등 여러 조치들이 시행된 만큼 편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금년 중 편입이 결정될 경우 외국인투자자 유입 확대 등을 통해 주가지수 상승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다양한 주주 환원강화 방안(예: 자사주 소각, 저PBR 기업 정리 등)이 추진된다면 현재의 벨류업 프로그램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기업들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청년층 자산증식 지원:** 청년미래적금 신설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청년도약계좌와 동일한 취지로 이해되며,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도입’도 사회적 이견이 크지 않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년시절에 이용을 시작한 계좌는 계속해서 이용하는 경향(계좌 초두효과)이 있으므로, 금융회사들은 청년미래적금 도입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신규 고객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펫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진료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가 취약하여 시장형성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료비 투명성이 제고되면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만큼 보험회사들은 논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상공인 금융부담 감축:**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약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익보다는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정책 시행에 따른 재무적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새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동안 간편결제 수수료의 적정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정부는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공시 의무 부과 외에는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을 자제해 온 바 있습니다.

아직 새 정부가 간편결제 수수료 완화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펼칠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신용카드와 유사한 적격비용(원가) 산정 체계를 간편결제에 도입하는 급진적 접근이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를 적용을 의무화하는 온건한 입법적 접근 등 다양한 해법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간편결제 사업자는 정부가 육성 대상으로 천명한 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하며, 이들 역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부담 완화 정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핀테크 산업의 혁신과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상생과 균형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핀테크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설계를 통해,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포용금융 확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마련, 맞춤형 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대환대출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면제,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 포용금융 정책이 전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되었던 포용금융 정책이 대폭 확대 개편된 포용금융 시즌2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포용금융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사회적 압력도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 협력함과 동시에, AI등을 활용한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등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세 곳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인가를 받아 활발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 이들 인터넷 전문은행은 경직된 은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메기’ 역할로 주목받았으나, 중금리대출 취급 실적이 미흡하고, 예대마진 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새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중금리대출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 신설을 공약하였으며, AI 및 핀테크 기술을 접목한 여신심사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CSS)의 고도화, 그리고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의무대출 비율 상향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약은 인터넷은행 시장에 진입을 준비 중인 예비 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 기존 인터넷은행에는 사업모델을 재정비할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존 인터넷은행은 2023년 말 발표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평잔 기준 30%)를 상회하는 수준의 추가적인 책무가 부과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정부의 제4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이 앞으로 금리 단층 현상 완화는 물론, AI 등의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은행업 전반에 새로운 경쟁과 혁신을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험가입자 권리 보장:** 본인부담상한제를 '우선지급-사후정산'으로 개선할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전액을 우선 지급받아 자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차년도에 직접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정산시스템 등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1, 2 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적자누적으로 매년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택형 특약옵션 도입이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부담보 특약 범위, 적절한 보험료 할인 수준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험업계는 미리 의견을 정리하여 금융당국에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통합 상호협정 체결은 불건전영업시 보험회사 뿐 아니라 GA에 대해서도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호협정에 각 업권의 특수성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혼·출생 지원 확대:** 저출생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아이에게 펀드 가입 및 정기 입금하여 주고 여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신혼부부에게 결혼·출생 지원금을 대출하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펀드 운용 및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기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전문가(금융)



정성구 | 변호사

T. 02-316-4763

E. skcheong@shinkim.com



장윤석 | 변호사

T. 02-316-4385

E. ysjang@shinkim.com



최석 | 변호사

T. 02-316-1758

E. schoi@shinkim.com



허준범 | 변호사

T. 02-316-4351

E. jbheo@shinkim.com



김종기 | 변호사

T. 02-316-4271

E. jkkim@shinkim.com



정지원 | 고문

T. 02-316-4012

E. jwjung@shinkim.com

4-2 가상자산

[Key Point]

-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으로 관련 시장의 활성화 예상되면서도 강화된 규제의 준수를 위한 사전 대비가 필요

주요 공약

▶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조성

-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 가상자산·연계상품 제도화 및 안전한 투자기회 보장
- 토큰증권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한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

시사점

EU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시행, 미국의 가상자산 전략적 비축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GENIUS Act)의 통과 가능성 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체계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연이어 경신하면서 국민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상자산에 대한 2단계 입법 본격화:** 이는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입법을 넘어,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영업·감독까지 포괄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은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나타내며, 동시에 가상자산을 금융시장의 주요 축으로 인정하고 체계적인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다만, 2단계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가상자산의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각 영업행위가 별도의 인가 단위로 분리되고 검영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장 및 상장폐지 절차에 대해 공적 통제가 강화될 수 있어, 가상자산업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 추진**: 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로, 가상자산이 전통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물론, 연기금·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확대되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및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ETF 도입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수탁업자의 자격 요건, 가격지수(Index Pricing) 산정 방식, 지정참가회사(AP, Authorized Participant)의 역할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합니다.

● **토큰증권(STO) 법제화**: 이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 증권 발행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그간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현재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련 법제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이 제도화될 경우, STO 발행 플랫폼, 유통 인프라, 기반 투자상품의 설계 및 운용업 등 다양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인 원화와 1:1 가치 연동을 전제로 하며, 블록체인 상에서 전송 및 거래가 가능한 민간 주도의 디지털 원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계좌 기반 금융에서 토큰 기반 금융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결제 플랫폼(예: 온라인몰, 구독서비스), 해외 송금(저비용·고속 전송), 블록체인 지갑 개발, 온·오프체인 연동 API 서비스 등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전문가(가상자산)



황현일 | 변호사

T. 02-316-4453

E. hihwang@shinkim.com



허준범 | 변호사

T. 02-316-4351

E. jbheo@shinkim.com

5 기업지배구조

[Key Point]

-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시 주주 친화 정책의 강화와 세심한 법률 검토 체계 마련할 필요
-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투명한 회계운영과 재무관리, 주주소통 강화 등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주요 공약

▶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해 일반주주 권익 보호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 제시
-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견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
-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유도
- 소수의 지분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우려 해소

▶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가액 결정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 적용
-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일정 배정 제도화
- 기업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도입
-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 간 합병 시 일반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합병검사인 제도 도입

-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시사점

- **주주 충실의무**: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로 최종 입법화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공약이 입법화될 경우, 회사 조직 및 지배구조 개편, 인수합병(M&A), 투자 및 자금조달의 의사결정이나 실행에 있어서 해당 절차가 거래 당사자인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행동주의 펀드와 같은 소수주주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적용 범위, 형사책임과의 관계 등에 대한 해석상의 불확실성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이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소수주주 측 인사가 감사위원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비교적 높은 상장회사[예컨대,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주식을 30%(자회사는 상장 손자회사의 지분 30%)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합니다]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3%를 규제가 결합되어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에 그러한 상장회사의 경영진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 **집중투표제 활성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선임 인원만큼 부여하여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와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나, 그에 따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적 주주제안이란 회사에 대한 이행강제적 효력이 없는 주주제안으로서 그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법적으로는 해당 결의에 ‘권고적 효력’만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가 주주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영진의 재량권을 위한 적절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투표·회의장 의무화**: 당해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전자투표는 전자주주총회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점 및 민주당이 최근 입법화가 무산된 일정한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근거 규정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의 재추진 의지를 표명한 점에 비추어 향후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상장회사 입장에서는 관련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회의장 음성·영상 동시 송수신 시스템, 전자투표 시스템 등의 정비 및 전자적 출석과 주주·대리인 확인방법 마련 등 다각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 신주 우선배정**: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이른바 ‘쪼개기 상장’) 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일정 비율의 신주를 우선 배정할 경우, 회사에 적대적인 소수주주의 지분이 확대되고 신주 우선 배정 과정에서 IPO 일정이 장기화되고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M&A 의무공개매수**: 기업 M&A 과정에서 매수자가 경영권 확보 지분 취득 시 잔여 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매수자 입장에서 예상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므로 추가 거래비용 지출이 불가피해지고, 이로 인하여 거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회사 경영권 양수도 거래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상기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다양한 거래구조를 검토한 후 최선의 거래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장회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자사주 원칙적 소각이 제도화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 및 우호세력에 대한 주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방식의 자금 융통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대체 자금 조달 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분구조 및 재무구조의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자사주 활용도가 높은 상장회사의 경우 향후 자사주 소각 의무가 제도화되는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의 독립이사 비율 확대, 상장법인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 상장법인과 계열사 간 합병 시 합병검사인 제도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지배주주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통한 소수주주 보호책이 새 정부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에 M&A 거래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특히 기업은 내부통제 강화, 주주소통 확대, 경영 안정성 유지를 위한 다각적 방안의 모색 등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기업지배구조)



장재영 | 변호사

T. 02-316-4350

E. jychang@shinkim.com



김병태 | 변호사

T. 02-316-4038

E. btkim@shinkim.com



안혜성 | 변호사

T. 02-316-4700

E. hseahn@shinkim.com

6-1 노동

[Key Point]

- 기존보다 더욱 탄탄한 노사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갈등·분쟁의 원만한 조정 위한 내부체계의 선제적 정비 필요
- 법적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 위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임금체계 마련할 필요

주요 공약

▶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업체에게 하청업체 근로자로 이루어진 노동조합과의 교섭의무를 부여

▶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2025년 내에 추진

▶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기업이 근로자가 아님을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

▶ 노동법 적용 확대

- 근로기준법을 상시 5인 미만 기업에까지 확대 적용
- 초단시간노동자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보장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강화

-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들에게 적용되는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 보호대상의 명확화 및 적용 범위 확대
-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노동행정 및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 실질화

▶ 직장내 민주주의, 노사자율 강화로 반드시 실현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추진
- 사업(장)내 노사자율 협의를 주도할 “근로자(노동자)대표 위원회” 상설 제도화
-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ILO 190호(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관한 협약) 비준 추진

▶ 근로시간 단축

- 주 4.5일제 추진

▶ 포괄임금제 금지와 근로시간 관리 강화

-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추진
-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 초기업별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

- 공공부문이 초기업별 교섭 모델 구축
- 단체협약의 자동효력확장 또는 행정명령에 의한 효력확장 등 추진

▶ 임금분포제 도입 및 임금정보 제공

- 직무, 직위, 근속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 초기업별 교섭 지원을 위한 임금정보 제공

▶ 근로감독 강화

- 근로감독관 증원 및 지방자체단체에 근로감독권 부여해 중앙정부와 병행

▶ 청년 지역 중심의 고용(일자리) 정책으로 혁신

- 청년의 일할 권리와 기회 강화
- 지역고용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 이용자 편의 극대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통일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추진

시사점

- **노란봉투법**: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현실화되는 경우 노사관계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산업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하여 왔던 공약입니다.

현재 하청업체 근로자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은 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정의조항을 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분의 하청업체 노동조합은 도급비 결정권이 있는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이 없다면서 교섭을 거부할 가능성이 큼니다. 결국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결정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을 둘러싼 일대 혼란과 분쟁의 증대가 예상됩니다.

-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 이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의 수혜자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될 것이고, 이는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비판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도 정년에 이른 근로자는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임금을 조정하여 다시 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를 고령자고용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년연장이든 계속고용이든 방식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년연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 기업들은 인건비 증대에 직면하면서 청년고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년연장 시에 임금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년연장 과정에서 실질적인 쟁점은 임금조정 가능여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과로사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공약입니다. 경영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산업경쟁력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면 노동계는 임금의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만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방안이 도출될 것입니다.

-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고용노동부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들의 애로사항은 보수에 관한 것(보수미지급, 보수의 일방적 삭감 등), 사업자의 일방적 의사결정(일방적 업무미부여, 부당 계약해지, 부당 추가업무부여, 비용이나 손해의 부당부담 등),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이나 성추행, 괴롭힘 등입니다. 새 정부에서 이러한 노무제공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는 유사한 취지의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일하는 사람에 대한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와 부당해지 제한, 육아휴직과 임신부 보호,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의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유사하게 규정될 것인지, 아니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독립사업자 사이에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는 취지로 규정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결국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들에 대해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증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기업들은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노무제공자의 수를 줄이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노무제공자들이 근로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임금분포제 도입**: 근속·직무·직급 등 다양한 항목의 임금분포 자료를 기업으로부터 수집하여 데이터화한 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입니다. 이는 초기업별 교섭을 지원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임금수준 등을 공개하여야 하는데 기업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임금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의 임금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에 동일한 임금수준을 강제하는 것이 어렵기에, 향후 새 정부의 정책추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금지**: 포괄임금제는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제도로써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포괄임금제에 대해 대법원이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정책추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시간 의무기록제는 선진국에 많이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며, 근로시간 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 등을 고려할 때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정의규정이 없고, 실무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의무기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근로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초기업별 교섭**: 초기업별 교섭의 확대는 노동계의 오랜 주장이고, 이를 위해 초기업별 교섭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이 초기업별 교섭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초기업별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여 초기업별 교섭의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적용, 초단시간근로자 보호,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 보호 등은 주로 소규모 업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체협약 효력확정**: 단체협약의 자동효력 확장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행정명령에 의한 효력확장은 동법 제36조의 지역적 구속력과 유사한 제도로 보입니다. 향후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감독 강화**: 새 정부는 임금체불근절 등 근로자 권익보호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병렬적으로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해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앙과 지방 간 실적주의에 치우친 과도한 감독, 이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전문가(노동)



김동욱 | 변호사

T. 02-316-1646

E. dwokim@shinkim.com



윤혜영 | 변호사

T. 02-316-4491

E. hyyun@shinkim.com

6-2 중대재해

[Key Point]

- 모든 노무제공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선제적으로 광범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할 필요
- 모든 원료·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생산자부터 유통업자까지 폭넓은 책임의식 가지고, 제품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강화할 필요

주요 공약

▶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으로 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건설공사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에서 안전대책 강화
 -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설치
 - 건설산업 적정임금제 도입
 - 건설근로자 불법고용 방지, 부실시공 사망사고 예방대책 강화
-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축물재난안전 인프라 강화
 - IoT 등 스마트기술과 로봇,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반복되는 지하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및 위험지역의 건축기준·시공방법 별도 마련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 산업단지 주변 발생 악취의 독성물질 함유 확인과 배출물질 관리·감독 강화 추진
- 불법유통 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진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으로 경쟁력 강화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 중소기업 산재예방 및 작업장 안전을 위한 투자·세제지원 확대

▶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 산업안전보건법을 개편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
- 후진적 산재예방시스템 전면 개편
 -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사업장 위험성 평가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벌칙 도입
 - 과로사 방지 및 감정노동 등 정신건강 장애 예방 마련
- 산업안전보건체계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 확대

시사점

-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새 정부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되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건설공사발주자)의 경우 도급인보다 완화된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의무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기준이 정립되었습니다(2023도14674). 이에 각 기업은 자사가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설계, 감리 등의 과정에서의 안전대책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건축물 등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시민이 재해를 입은 경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구체적 내용이 상이하므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별도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새 정부에서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원료는 유해 위험물질에 한정되지 않으며, 원료 제조물의 생산,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판매, 유통업자도 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사고는 보통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대한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2019년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일부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사업자를 노무제공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범위를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보호대상으로 포섭되는 경우 사업주는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전제하므로,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범위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이에 개별 기업은 자사에서 사용하는 노무제공자 유형을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는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 **후진적 산재예방시스템 전면 개편**: 새 정부에서는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령 하에서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도급인의 의무 범위가 전보다 확대되거나 그 내용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벌칙규정 도입, 위험성평가의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 절차가 상당부분 변경되었으므로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각 사업장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로사나 감정노동 등 사무직 근로자에 관한 안전보건기준의 신설, 강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무직 근로자를 주로 사용하는 기업도 관련 기준의 개정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체계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나 작업중지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근로자의 참여 규정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의 미비나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불참 등은 중대재해 사건에서도 사업주의 의무 위반으로 자주 지적되는 부분인 바 개별 기업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체계에서 근로자의 참여가 미흡한 부분을 검토·보완하고, 변화되는 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위 공약들에서 언급된 건설공사발주자, 원·하청의 안전보건 조치,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쟁점이 된 사건이나 중대시민재해, 화학물질 참사 등 다양한 유형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고, 그 외 중대재해·산업안전 관련 자문과 컨설팅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저희 센터에서 개별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개편이나 사건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중대재해)



진현일 | 변호사

T. 02-316-2897

E. hijin@shinkim.com



김태승 | 변호사

T. 02-316-1771

E. tskim@shinkim.com



정해운 | 변호사

T. 02-316-1844

E. hyoojung@shinkim.com



서영우 | 전문위원

T. 02-316-2893

E. ywoseo@shinkim.com

7-1 문화예술/관광

[Key Point]

- 다양한 한류 콘텐츠 분야에 대한 제작지원, 세제혜택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다양한 성장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문화정책 전반을 관장할 국가문화강국위원회 신설로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과정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

주요 공약사항

[문화예술]

- ▶ 정부지원 민간 주도로 ‘Live Aid K-POP 콘서트(가칭)’ 추진, 해외 콘텐츠 지원 센터 확대 및 K-Food 지원기관 입주
- ▶ 콘텐츠 신성장·원천기술 지원 확대, 콘텐츠 분야 세제지원 확대, 콘텐츠 재투자 목적인 경우 환급형 인센티브 지원, 새로운 창작환경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 불법 유통의 신속 차단 및 해외 수사 공조 강화
- ▶ 한류문화의 국내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등 조성, 글로벌 수출용 다국어 번역 등 지원,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 ▶ 문체부 산하 국가문화강국위원회 설치

[관광]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문화관광산업특구’를 지정하고, 지자체·기업을 매칭하여 위케이션 관광 활성화

시사점

- **정부 지원 콘서트 등 추진:** 정부 지원 민간주도의 한류 콘서트 등 큰 규모의 행사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그 밖에 해외 수출되는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에 있어서 지원 및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사업자의 경우,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을 면밀히 주시하고,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 및 혜택이 있는지 분석하여 가능한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구조를 구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류 콘텐츠 산업 지원:** 음악, 웹툰,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작 지원 및 세제 혜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텐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의 범위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초기 법인의 설립과 영업분야의 설정 등의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불법 저작물 유통에 대한 신속 대응:** 해외에 서버를 둔 채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신속한 접속 차단 조치 및 해외 수사 공조를 강화하여, 국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에도 해외 수사 공조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만 실효적으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사업자의 경우, 구체적인 제도의 방향 및 활용 방법을 주시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콘텐츠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아레나공연장 등 설립:** 국내 대형 공연장의 설립과 K-Pop 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공약인데, 설립되는 공연장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pop 사업자들로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 및 혜택이 있는지 분석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반영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판 실리콘밸리:** 기업·연구소 등이 집결하여 생산·유통이 이루어지는 자급형 콘텐츠 전문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인데, 그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제작 과정에서의 지원 및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텐츠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문산업단지의 지원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의 범위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초기 법인의 설립과 영업분야의 설정 등의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가문화강국위원회 설치**: 문화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체부 산하 ‘국가문화강국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가문화강국위원회의 설치로 인하여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과정에서 관련 제도의 변경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는 향후 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업무 범위 설정 및 관련 제도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 내부적인 조직 및 매뉴얼을 준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문화관광산업특구 지정 및 위케이션 활성화**: 국책사업으로 문화관광산업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위케이션을 도입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및 혜택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들은 해당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및 혜택이 있는지 분석하여, 근로자 등과의 계약 등을 체결할 때 이를 반영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문화예술/관광)



임보경 | 변호사

T. 02-316-4041

E. bklim@shinkim.com



오영우 | 고문

T. 02-316-4303

E. ywoh@shinkim.com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7-2 게임

[Key Point]

- 게임 및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기반으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및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진출 및 인디게임 활성화 지원정책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제고 등 새로운 성장기회 열릴 것으로 기대

주요 공약

- ▶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규제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
- ▶ 게임 등 K-콘텐츠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참여 프로그램 확대 및 경쟁력 확보
- ▶ 게임 등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디톡스, 회복 프로그램 운영

시사점

게임 질병코드 등재 이슈 관련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새 정부는 기본적으로 게임산업 친화적인 방향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업계는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들의 공론화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균형 있는 게임문화:** 게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전국민 대상 캠페인이나 글로벌 이벤트 행사 등의 형태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와 사행성이라는 전통적인 규제프레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국가 성장동력으로서의 K-콘텐츠 산업의 한 축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e스포츠를 게임산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관련 진흥정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건전한 게임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규제개선**: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등급분류체계·내용수정신고·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제도 등에 대한 개선작업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 차원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제기능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진흥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게임 관련 기관이나 기구를 출범시키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예상됩니다.
- **글로벌 진출 지원**: 기본적으로는 이미 출시된 게임을 대상으로 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단계부터 역량 있는 PM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진출하려는 국가별 법제도나 문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할 것입니다. 특히 K-콘텐츠 활용 중소기업 수출참여 프로그램 확대정책 추진과정에서 게임 관련 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글로벌 진출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디게임 활성화**: 종래 게임 관련 정책논의가 대형게임사나 주류게임 및 플랫폼 위주로 이루어진 부분에서 더 나아가 중소게임 내지 인디게임을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게임 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개발/서비스 분야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첨단기술을 적용한 게임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이러한 아이디어가 사업화 과정을 거쳐 경쟁력 확보기반 제공으로 순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7-3 방송미디어

[Key Point]

- 문화강국 달성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의 지원 확대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수익증대 기회 열릴 것으로 예상
- 동일·유사 서비스 간 규제 형평성 개선, 신·구 미디어 간 규제 역차별 해소 정책들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환경 구축될 것으로 기대

주요 공약

▶ 방송의 공공성 회복 및 공적 책무 이행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편 및 수신료 배분체계 개선
- 공영방송의 공적기능과 역할 명확화
-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 방송미디어의 자율심의 기능 강화 및 신뢰성 회복
- 반헌법적, 반사회적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책임성 강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강화

▶ 방송영상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부응하는 법제 및 기구 개선

-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거버넌스 및 법제 통합
-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전면 개정

▶ 글로벌 미디어 강국 기반 조성

-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 미디어 R&D 및 제작 투자 등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 확대
- K-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강화
- 홈쇼핑 등 미디어 커머스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 방송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방송미디어 규제형평성 및 규제체계 선진화
-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제도 혁신
-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 개편
-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기반 조성

▶ 지역·중소방송 활성화 적극 지원

-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확대
- 광고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중소방송사 제작 지원
- 방송의 지역성 구현 지원 강화

▶ 차별 없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 취약계층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및 미디어 복지 강화

시사점

큰 틀에서의 정책방향은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공영방송 거버넌스 및 미디어 규제체계 개편의 세 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 관련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의 핵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리잡고 있고 이에 더하여 공영방송 관련 각종 이슈가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그 해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거버넌스·법제 통합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전면개정 등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방송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논의는 전체 정부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는 과정속에서 함께 검토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조직 개편 논의와 맞물려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새정부 출범 이후 속도감 있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기업 경영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방송의 공공성·공적 책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진 구조 및 선임방식을 시청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사 및 사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정의 및 책무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적기능과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아울러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추천하는 편성위원회의 설치를 법제화하는 정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신뢰가능한 미디어 이용환경**: 방송미디어의 자율적인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미디어의 신뢰성, 책임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글로벌 미디어 강국**: 미디어 R&D 및 제작 투자 등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K-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련 기업들은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융합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세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특화된 데이터홈쇼핑 채널도입과 함께 기존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도 병행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방송미디어 경쟁력 강화**: 동일/유사 서비스간 규제형평성 개선, 전통/신유형 미디어간 규제 역차별 해소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규제체계 선진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산업의 핵심자원인 광고재원에 대한 제도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송광고제도로의 혁신을 꾀할 것입니다. 한편 꾸준히 논의되어온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의 통합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재원이 방송미디어의 경쟁력 강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 밖에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간 공정하고 투명한 대가산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도 아울러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전문가(게임/방송미디어)



강신욱 | 변호사

T. 02-316-4059

E. sokang@shinkim.com



이원석 | 변호사

T. 02-316-4493

E. wselee@shinkim.com



이종관 | 수석전문위원

T. 02-316-4480

E. jkwlee@shinkim.com



김지훈 | 수석전문위원

T. 02-316-2883

E. jhookim@shinkim.com

8 보건/의료/제약/바이오

[Key Point]

- 의료·제약 산업의 공공성 강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대 및 시장 경쟁 구도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위한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 관리 강화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의료기관 및 관련 기업의 수익관리 중요성 증대

주요 공약

▶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확대 및 보상체계 개편
 -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및 성과도출 · 공공환원형 지원체계 강화
 - R&D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약가관리제도의 통합 및 예측가능성 확보
 - 글로벌 진출 신약개발을 위한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추진
-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 및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 지속투자과 혁신창출을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
 - 제약기업에 대한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
 - 제약기업의 사회적 기여 확대 유도 및 기여 방식의 다양화 지원
- 필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
 -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적극 지원
 -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국가필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 수급불안 필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
- 넥스트 팬데믹 대비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및 국제협력 확대 · 강화

▶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신뢰성 확보 집중

-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 의과학자와 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학 융복합 지원체계 구축
-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혁신성 제고와 적정보상 체계 마련
 -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진출과 수출 증대 지원
 - 의료기기 질 관리체계 정비와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적정 보상기준 마련
- 간담제도 등 불공정행위 개선을 통한 의료기기 산업 유통구조 선진화

▶ 농촌재생프로젝트로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삶터·일터·쉼터로 탈바꿈

- 의료, 돌봄, 생활, 교통 등 필수 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한 복지 구현
 -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확대, 찾아가는 생활 서비스 확대

▶ 국제적수준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추진

-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의 전파자인 침입 외래종 관리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생물안보(Biosecurity) 강화 추진
 - 침입 외래종, 인수공통감염병, GMO관리 역할 강화

▶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 조성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조성

- 아동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불평등 해소

▶ 국가유공자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

-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역 내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 보훈병원 도입으로 위탁병원에서 지원되지 않는 혜택 확대
- 지역 연계 보훈 주치의제 도입
-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분들을 위한 방문진료사업 확대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종합 대책 추진

▶ 장병 복무여건 개선/문화예술인 복지환경구축

- (장병) 장기근속자는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문화예술인 사회보험 보장 확대
 - 건강보험료 지원 신설

▶ GMO완전표시제 도입, 청년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 식생활 돌봄을 강화

-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도입(단계적 확대 추진)

▶ 여성의 성 재생산권 보장과 건강 증진 위해 노력

-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권 강화 및 의료 접근성 제고
- 성 재생산 건강증진을 위한 공적 의료체계 구축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
 - 현재 여성청소년에게 무료 지원되는 접종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
 -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양질 백신 전환 검토

▶ 권리보장 강화로 장애인 사회참여 실현

- 건강권 보장확대
 - 장애인 주치의 제도 확대
 -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전달체계 개선

-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지원 확대
-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 난임부부 지원 강화

- 난임 조기 예방을 위한 남녀 기초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

▶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 질을 개선

- 청(소)년, 중장년, 노인, 1인가구 등 주요 집단별 외로움 대응 정책 개발
 - 정신건강 지원 정책 청소년 및 노년층의 우울 분노, 스트레스 상담 및 검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여가 및 취미활동 등 지원 확대, 치유목적 원예활동 등 체험장 조성

▶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 노인·장애인·병약자 등이 시설에 입소(입원)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 서비스 전문가가 이용자를 찾아가 제공하는 방문진료, 방문재활, 방문요양, 방문가사, 주간·야간·단기 보호, 영양식 식사 지원 등 재가서비스 대폭 확충
-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을 노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 돌봄전담부서 신설 및 전담인력 확충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확대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부담 완화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질 향상
 - 공공 의료기관 및 지역 거점병원 전면 확대로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 300 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단계적 확대로 수술·중증환자 간병부담 완화
-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하여 간병 질 관리 제고
-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기능 재정립 지원

▶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

- 정서 행동 문제, 경계선 지능 등 고위험 청소년 정책 강화
 - 고위험군 청소년 맞춤지원을 위한 장기 상담지원과 야간 및 긴급 상황, 의료지원 등 대응 강화

▶ 지역필수 공공의료 구축

-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가산 수가 적용
 -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관에 대한 공공의료 역할 수행 보상체계 강화
- 지역의사제 지역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 확보
-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및 필수의료 지방분권 확립
-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공공병원 없는 곳은 신축 및 공공인수·공공적 전환 추진

▶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

-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 의료인, 전문가, 환자 및 시민대표 모두가 참여하여 사회적 논의·합의 추진
- 국민 모두가 지지하는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 제시
 -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운영,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관련 조직 합리적 개편
-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개혁 추진 방향 설정
-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적정 인력 확보

▶ 맞춤형 주치의제를 활성화, 방문 재택 진료 확대

-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 의료기관별로 대면진료-비대면진료-방문진료 융합형 서비스체계 도입

-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 노인질환·소아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국민 주치의제 추진
-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 환자 중증도 맞춤형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설정 및 보상 강화
-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
-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구축

▶ 국고 지원으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보장성 지속 확대로 의료비부담 완화

-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
 - 대안적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 과도한 의료이용 억제와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관리체계 강화
 - 공정한 보험료 부과기준 확립 및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 억제 및 사전예방 강화
 - 대리수술,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을 유발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에 대한 면책 및 신고포상 확대
 - 의료기관 불법 개설자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 강화
- 노안어린이 질병 예방과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보장 확대
 -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 노인 중증호흡기질환 조기 진단 및 예방적 치료 강화
 - 영유아 RSV(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항체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청소년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 중·고생까지 확대
-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
 - C형 간염 등 완치 가능한 질병에 대한 국가검진 및 관리체계 개선
 - 전립선암 등 치료 효과가 명확한 질환에 대한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 추진

▶ 희귀난치질환 지원 확대, 소아비만·소아당뇨 국가책임 강화

-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부담 완화
 -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인하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등재 제도개선
- 희귀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으로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강화

-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및 활용
- 민감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및 공적 활용

시사점

새 정부는 보건/의료/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 등 비즈니스적으로 기회의 문이 넓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세종은 보건/의료/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제품·기술의 개발 단계에서 건강보험 급여등재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 신약 건강보험 등재 등 market access 자문, 정부규제의 준수를 위한 자문과 소송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의료·제약 산업의 공공성 강화:** 새 정부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R&D 국가 투자 시 ‘공공환원형’ 지원체계 강화,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공공병원 신축·공공인수·공공적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제약 분야에 공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른 기업의 기회 요인이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성 강화와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필수의약품, 필수의료에 대한 인프라 강화:** 필수약품과 필수의료에 대한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전세계적인 의약품 부족 현상과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공급 차질 문제로 인하여 주요 정책 이슈입니다. 새 정부는 필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 및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필수의료 강화를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을 통해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의대,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중심의 필수의료 인프라 확대는 지역 의료기관에게 기회 요인이 될 것입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특히 초점을 맞춘 의약품 보장성 강화:** 새 정부는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강화의 일반론으로는 위험분담제 적용 확대,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제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등재 제도 개선 및 이에 대한 환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고가 혁신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등재에 있어서 기회의 문이 더 열릴 것으로 기대되며, 위험분담제 적용 확대도 신약의 건강보험권 진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새 정부가 전체적으로 AI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역시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진출과 수출 증대 지원,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적정 보상기준 마련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과 식약처의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가 더욱 큰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 제도권 내 진입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문진료, 주치의제 확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문진료의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차 의료전달 체계를 주치의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적 한계를 벗어난 의료 서비스 제공 확대로 의료산업은 물론이고 관련 플랫폼 등 기반 기술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장 확대**: 새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난임부부 지원 강화 등 고령자, 여성 등에 초점을 맞춘 보장성 강화 외에,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국민 의료비 절감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완치 치료제가 있는 C형 간염을 퇴치하기 위한 국가건강검진 확대, 치료 효과가 명확한 질환에 대한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완치가 가능하거나 치료 효과가 명확한 치료제,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전체 국민 의료비 절감의 측면에서 급여화 등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 새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인, 전문가, 환자 및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거버넌스의 중심으로 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까지 이어지는 의료전달 체계, 지역 의료 인프라, 의료인력 수급 등과 관련된 방향 설정에 대하여 긴밀히 모니터링하여 산업의 기초가 되는 지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예측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강한 규제**: 새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도한 의료이용 억제와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관리체계 강화,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보건/의료/제약/바이오)



김성태 | 변호사

T. 02-316-4326

E. stkim@shinkim.com



김현욱 | 변호사

T. 02-316-4032

E. hwokim@shinkim.com

9 에너지

[Key Point]

- 에너지 분야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 기후에너지부 신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정책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며, RE100 지원 강화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의 비용절감 및 민간 전력구매계약(PPA)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에너지 조달 및 투자 전략 수립해 새로운 기회 포착할 필요
- 대규모 송전망 구축은 대형 프로젝트 추진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2040년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 계획에 따라 기업 발전 포트폴리오 재편 및 탈석탄 투자전환을 위한 전략적 접근 요구

주요 공약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실현

- RE100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 재생에너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리 기업의 RE100 역량 강화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차원의 해상풍력발전 지원
-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춘 전력공급의 유연성 강화 및 전력 ICT 강화
-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 청정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

▶ 햇빛연금 지급 및 에너지 자립 실현

- 주민 주도 공공형 햇빛소득마을 조성으로 에너지 주민소득 지급, 마을 복지 · 에너지 사용

- 농촌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햇빛연금 지급
-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마을과 영농에 활용하는 에너지 자립 추진
- 농식품 RE100 단계적 도입,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 향상

▶ 석탄발전소 2040년 폐쇄 및 전환 추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제정

시사점

- **탄소중립 대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국정 목표로 명시하고, 이를 위한 여러가지 구체적 실행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는바, 기업의 전력조달 구조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력전환 수요 확대와 민간 PPA 시장 성장 기대:** 새 정부는 RE100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및 정책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주도 RE100 확산은 글로벌 대기업뿐 아니라 국내 중견기업의 전력전환 수요를 유발하고, 민간 전력공급자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에서는 전환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전력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관련해서는 특히 계통 상황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인센티브 기대:** 새 정부는 RE100 대응 역량이 부족한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100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장기 고정단가 전력공급계약(PPA)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개별 사업지를 개발하는 것 대비 계통 접속비, 인허가 비용, 부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입주자격, 평가기준, 우선순위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관할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비용 안정화와 RE100 이행을 달성할 수 있도록 RE100 산업단지 하에서 가능한 PPA 구조 다양화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 **계통제약 해소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조성:** 새 정부는 서해안 해상풍력과 충청권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영남으로 연결하는 HVDC송전망 구축 계획을 담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상풍력, 대규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산의 병목인 계통연계 한계 문제가 해소되어 대형 프로젝트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은 장기의 건설 기간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지역주민 동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일정 및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주민보상 등 이해관계자 협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햇빛연금 및 에너지 자립모델 확산:** 전남 신안군에서 시행중인 햇빛연금의 전국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 수익의 일정 비율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경우 기업들은 초기 투자비 회수 기간 연장과 수익률 조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개발 초기부터 주민이 직접 투자 또는 지분참여자로 참여함으로써 집단 민원, 반대운동 등 인허가 지연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어 지역 마찰이 심한 프로젝트에서는 위험을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이익공유 모델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주민참여형 프로젝트의 법적 구조를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40년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대응 전략:** 목표대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조기 퇴출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은 발전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가동 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석탄발전소 대신 가스·원전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는 투자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하므로, 동법 제정시 그 내용을 분석하여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기반 신산업을 유치할 기회를 도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 전문가(에너지)



이상현 | 변호사

T. 02-316-4068

E. shlee@shinkim.com



정수용 | 변호사

T. 02-316-4345

E. syjung@shinkim.com



유나 | 변호사

T. 02-316-1757

E. nyu@shinkim.com



유정열 | 고문

T. 02-316-4740

E. jyyu@shinkim.com

10-1 정보통신

[Key Point]

- 병사 통신요금 할인, 데이터 안심요금제 등 통신비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은 다양한 방면에서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
- 5G 백홀 와이파이 확대 등 통신품질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 관련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주요 공약

▶ 국민 정보통신비 부담 경감

-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 알뜰폰 및 자급제폰 활성화 추진
- 전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
-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제도 확립
- 병사 통신요금 할인 확대
- 5G 백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시사점

- **통신비 부담 경감**: 새 정부는 근로자 본인과 자녀 및 65세 이상 노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비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병사의 통신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비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으며, 22대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병사 통신요금 할인 역시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병사 복지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재정부담, 할인대상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알뜰폰 및 자급제폰 활성화:** 가계통신비 절감, 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측면과 아울러 단통법 등 단말기 유통시장과 연계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향후 관련 논의과정에서 세밀한 정책적 접근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데이터 안심요금제:**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후에도 추가 요금 부담없이 특정속도 (QoS)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금제를 말합니다.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별도의 요금부담 없이 데이터 단절을 방지할 수 있으나, 속도제한 및 요금 수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 **5G 백홀 와이파이:** 새 정부는 5G 백홀의 공공 와이파이를 광역 지하철(공항철도 포함)에 설치하여 고품질의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구축비용 등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2 과학기술

[Key Point]

-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R&D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으로 예상
- 기업 중심 개방형 R&D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

주요 공약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3대 차세대반도체(전력, 차량용, 저전력 AI반도체) 기술 개발
- 차세대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
-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팹리스·첨단패키징·및 소부장 기업 등 종합 반도체 생태계 강화

▶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

- 국가 지출예산 대비 R&D예산 일정수준 이상 확보
- 정부R&D예산 심의기능 강화 및 운영투명성 제고
- R&D 성과의 산업확산 체계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 청년 과학기술 인력 지원 확대

-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
- 박사후연구원 법적 지위 명문화
- 학생연구원 인건비 확대

▶ 국가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과학기술정책 민간전문가 실질적 참여
- 부처별 분산R&D 체제를 집중체제로 전환
- 산업계 및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

시사점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 확대 및 효율화, 연구자 중심의 환경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과의 연계 등의 측면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책의 큰 흐름을 엿볼 수 있고, 정부 거버넌스 개편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규모 R&D를 계획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국가연구개발 정책의 큰 흐름이 바뀌는 것과 궤를 같이 하면서 투자 등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새 정부는 전력, 차량용, 저전력 AI반도체 등 3대 차세대반도체 기술 개발 및 차세대 이차전지 초격차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가균형발전과 대/중소기업 협력과 상생으로 보입니다. 국가과학기술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이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그룹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이 특정지역에 쏠리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각종 특구들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특화단지,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 산단 및 지역 산학연과 연계성을 가지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테스트베드를 조기에 구축하여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나아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및 중소기업과 연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새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과학기술 R&D 예산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연구개발 역량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R&D

예산을 국가 지출예산 대비 일정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 R&D 성과가
 쏠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과학기술 인재육성:**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인재육성 체계 재정비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년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수급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고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확대하는 한편
 신진연구자가 중견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가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예산 및 성과평가에서 대폭
 강화하고 과학기술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전문가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개방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R&D체제를 집중체제로
 전환 또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제기획을 포함한 R&D 전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민간 협력형 R&D를 대폭 확대하여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로의 대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10-3 AI

[Key Point]

- AI고속도로 건설 등 인프라구축, 차세대 반도체 등 AI R&D 생태계 조성 등의 과정에서 관련 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 열릴 것으로 기대
- AI 거버넌스 변화와 정책, 제도의 동향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컨설팅 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

주요 공약

▶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AI 3강 도약

- AI 등 첨단전략산업 100조원 집중 투자
- 인공지능 생태계 핵심기술 및 기반 확보
- AIoT·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AX 원스톱 바우처 도입
- 아태지역 NO.1 AI Hub 구축

▶ AI시대,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 및 투자 강화

-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
- AI 중심 차세대 네트워크(6G) 상용화
- Open-RAN 등 네트워크 고도화
- 양자정보통신기술 R&D 지원 강화

▶ 세계 최강 AI 인프라 구축

- 고성능 GPU 확보
-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육성

▶ AI 인재양성 강국 도약

- 세계 최고수준의 AI 인재 양성체계 마련
-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교육체계 구축
- AI 해외인재 유치 및 R&D 지원 확대
- 전 국민 AI 접근권 보장

시사점

- **AI 3강 도약**: 새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대도약 정책의 출발점을 AI에 두고 기술개발, 인프라, 인재양성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국가의 중요한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대전환(AI: AI Transformation)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 차세대 AI반도체 개발 지원 및 첨단전략산업 100조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국가대표 AI 기업 ‘K-미스트랄’, AI 특화 시범도시 ‘AI Home&City’ 등을 통해 아태지역 No. 1 AI Hub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진출기회를 모색하는 기업에게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AI 인프라 구축**: 새 정부는 최신 GPU를 확보한 AI데이터센터를 건설하여 ‘AI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AI데이터센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AI인프라 투자에 국가역량을 상당히 집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AI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하여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특화산업형 AI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은 지역거점 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혜택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집적 클러스터 정책은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사업자 등 관련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성능 GPU 확보 정책에 따라 관련 하드웨어 공급 및 유통 기업들은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 **AI 기술개발**: 새 정부는 저전력·고성능·NPU, PIM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산 AI 반도체 중심의 생태계를 조기에 확립하여 관련 산업생태계를 육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30년 AI 중심 차세대 네트워크(6G) 상용화를 추진함으로써 AI 핵심 인프라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나 장비업체들은 정부의 이러한 R&D 및 생태계조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인공지능 거버넌스**: 새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을 신설하는 한편 AI기본법 하위법령을 조기에 마련함으로써 AI 정책을 속도감 있게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가 AI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AI 관련 분야에 투자를 하거나 업무 수행을 계획한다면 새정부 출범 초기에 결정될 AI 거버넌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관련 정부 정책이나 제도의 동향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기업경영전략**: AI 관련 정부의 과감한 투자 및 정책집행에 따라 관련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성장과 변화가 뒤따를 것이므로 기업들은 AI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여 신규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AI 중심의 조직 재편을 통해 CTO/CAIO(Chief AI Officer) 역할 강화 및 AI 전담부서 설립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편 AI 기술력 확보를 위한 스타트업 인수나 전략적 제휴도 관심있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10-4 데이터/개인정보/정보보호

[Key Point]

- AI생태계 활성화에 따른 기업 보유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데이터 자산 전략수립의 중요성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정보보호 분야 투자가 강화되고 사이버보안 분야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주요 공약

▶ 손쉽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법제도 마련

- 제2차 디지털 뉴딜을 통한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확보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거래 활성화
- 의료, 금융 등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

▶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 국가 핵심 인프라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이버안보 강화
- 범정부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구축
-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보안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안전 대응 강화

▶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재정립 및 위상 강화
-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보호 평가·관리 체계 구축

시사점

- **데이터 활용:** AI 생태계 구축·활성화를·추진하기 위해서는 R&D/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고품질의 AI 학습용 데이터의 확보 핵심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 정부는 ‘제2차 디지털 뉴딜’을 통한 AGI 학습데이터 개발 및 확보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AI 시대 데이터 경제 고도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개방을 촉진하고, 데이터 가치평가·품질인증·표준계약서 등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AI 학습용 데이터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데이터 브로커, 큐레이션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과정에서 기존 AI기업들에게 고성능 AI개발 참여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한편 의료, 금융 등의 산업에서 데이터 규제혁신에 따른 산업내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가치평가를 통해 데이터자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타기업과의 데이터 공유 및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이버 위협:** 새 정부는 AI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의 핵심 인프라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가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네트워크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의 보호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및 전담인력 규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즉시 공지의무를 부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사이버보안의 영역을 새로운 산업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이버 보안기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주도의 보안제품 표준/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술변화의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자산과 위협요소를 식별하여 보안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등 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민관 협력 사이버보안 체계에 적극 참여하여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새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진흥과 개인정보보호라는 상호 이질적인 가치의 이해상충 해소방안을 마련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제도적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AI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평가·관리체계에 대한 정책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0-5

신사업플랫폼

[Key Point]

-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보호 수준 제고,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상생협력, 소비자 보호 등의 영역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

주요 공약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의 선제적·자발적·사업재편 촉진
-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차세대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 신기술·신제품의 사업화 및 시장창출을 위한 산학연 협력 강화

▶ 벤처·스타트업R&D 예산 대폭 확대

- 벤처지분투자 형식의 인큐베이팅

▶ 규제개선 및 갈등해소를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규제샌드박스 제도 효율적 운용
- 신기술 규제간소화 체계 구축
- 스타트업과 기존산업간의 갈등해결 및 협력 증진

▶ 딥테크 등 혁신분야 유니콘 기업 적극 육성

- 공공기관·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 혁신벤처기업 투자 확대
- 기술사업성 등에 기반한 정책보증 지원 강화
- 혁신벤처기업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제도 마련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공정화법 도입
-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 폐해 방지법 도입
-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재정비

▶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

-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보호 수준 제고
-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
-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입법
- 다크패턴 소비자 피해방지 강화
-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단체등록권 및 단체협상권 부여

▶ 모두가 행복한 배달문화 구축

- 배달시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
- 배달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안전배달문화 조성

시사점

- **신산업 생태계 구축**: 새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확대하여 혁신기업의 시장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실증특례 승인 이후 확인된 성과를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신산업 생태계 출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제혁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규제혁신은 중요한 국정 키워드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혁신 정책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출범 초기가 규제혁신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적극적인 규제개선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간의 갈등 해결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과도 도입에 실패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허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 육성:** 새 정부는 혁신벤처기업에 대하여 창업단계에서는 공공분야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성장단계에서는 기술사업성 등에 기반한 정책보증 지원을 강화하며, 상장단계에서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제도를 마련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R&D예산 중 상당부분을 벤처나 스타트업에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대해 벤처지분투자 형식으로 인규베이팅, 멘토링/전문가 지원 등의 종합서비스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스타트업 지원 정책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지원대상·방법 및 시기 등에 있어 복잡한 양상을 띄는 경우가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새 정부에서는 지난 수년간 이어져온 플랫폼 규제에 관한 난맥상을 해결하려는 정책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여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플랫폼시장의 자정기능 강화 및 경쟁촉진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가짜뉴스 모니터링, 참사/재난 피해자 온라인 명예보호, 디지털 서비스 장애발생시 조치/보고/고지 등 의무화 및 다크패턴에 따른 소비자 피해방지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의무, 망이용계약 제도화, 인앱결제 관련 보완 입법 등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의 정책 차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배달시장 공정질서 확립**: 새 정부는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배달시장 공정질서 확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달종사자 처우 및 사회안전망 조치들과 관련한 제도 역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정보통신/과학기술(AI/데이터/개인정보/정보보호/신사업플랫폼)]



강신욱 | 변호사

T. 02-316-4059

E. sokang@shinkim.com



안정호 | 변호사

T. 02-316-2891

E. jhahn@shinkim.com



정연아 | 변호사

T. 02-316-4316

E. yachung@shinkim.com



장준영 | 변호사

T. 02-316-4985

E. jyojang@shinkim.com



최재유 | 고문

T. 02-316-4013

E. jychoi@shinkim.com



윤종인 | 고문

T. 02-316-4209

E. jiyoona@shinkim.com

11 조세

[Key Point]

-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으로 기업의 국내 생산 유인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신성장 산업, 중소기업, 인구소멸지역 대상 세제혜택을 위한 입법 동향 주시할 필요

주요 공약

▶ 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금에 대한 지원 세제 도입

-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급 및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제품에 대해서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신성장 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공연, 출판, 영상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방산수출기업의 R&D 투자세액에 대한 감면
- 미디어 R&D 투자 및 OTT제작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지원 강화
- 벤처강국 육성을 위하여 법인투자자가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시 세액공제 확대
- 선·화주 상생기반 조성하는 화주, 환경친화적 선박을 제공하는 선사에게 세제 지원 확대

▶ 글로벌 환경에 강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 중소기업 산재예방 및 작업장 안전을 위한 투자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 및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등을 통한 세제지원

▶ 지방균형발전 및 재생에너지 비중확대

-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세, 소득세 감면 확대 검토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금액 상향
- 태양광·풍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 소상공인 지원 및 경영부담 완화

-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추진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시사점

새 정부는 세제지원을 통해 전략산업을 보호하고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금을 확대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새롭게 성장한 문화 강국, 방산 강국, 미디어 강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글로벌 관세 전쟁 이후 더욱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며, 지방균형발전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 **전략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새 정부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통해 국가전략기술급 첨단제품이 국내에서 최종 제조·판매되는 경우 그 생산량 및 판매량에 비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며,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현금 환급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상업종인 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사전에 각 제도에 따른 감면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조세감면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고 아울러 해외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의 경우 위 세제혜택을 고려하여 진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성장 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새 정부는 AI 등 첨단전략산업, 문화콘텐츠 분야, 방산 수출 기업 등에 대하여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벤처투자시장 육성을 위한 법인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환경친화적 선박을 제공하는 선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AI분야, 음악, 공연, 출판, 웹툰 및 영상 등 문화콘텐츠 분야 등 특정 분야와 관련되는 기업은 자신이 세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 시 적극적으로 조세감면 건의를 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글로벌 환경에 강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새 정부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이를 위한 세제지원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에 참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산재예방 목적의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될 특별법의 입법동향 및 그에 따른 조세감면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기타 세제 개선:** 새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확대를 검토하고, 태양광·풍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 방안 역시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 이전을 계획하고 있거나, 태양광·풍력과 관련된 기업의 경우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조세)



백제흠 | 대표변호사
T. 02-316-4052
E. jhebaik@shinkim.com



김병규 | 고문
T. 02-316-4504
E. bkykim@shinkim.com



김민 | 변호사
T. 02-316-4780
E. mkim@shinkim.com



김병호 | 세무사
T. 02-316-7959
E. bhkim@shinkim.com

12 형사/사법

[Key Point]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통한 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및 처벌 강화가 예상됨
-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신설해 보다 실효적인 변호·자문활동 기대됨

주요 공약

▶ 사법개혁

-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보장
 - 재판연구원 선발 확대, 1심 재판부 배치
 - 온라인재판제도 도입
- 법관평가제도 개선
- 국민 사법참여 확대(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및 배제 요건 강화)
- 대법관 증원,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 변호사 공공성 강화

- 국선변호사 보수체계 제도화,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확대
-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 변호사 징계권한을 별도 독립위원회 부여

▶ 국민 눈높이에 맞게 법제도 개선

- 자산·소득 비례 범칙금제 시범 도입
- 벌금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비율 상향
- 사면심사위원회 권한 강화

▶ 검찰개혁 완성

-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 절차법 제정
-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 반부패 개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 권력자를 비롯한 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에 보다 엄격하게 대응
 -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 수수 처벌 강화
 -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의 벌금 형량 강화
 - 공직자의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제도 법제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강화로 사적 이익 추구 차단
 -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직무 회피 규정 명확화
 - 공직자와 그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단체 범위를 현행 ‘재직여부’ 기준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 여부(지분보유 등)’ 기준으로 확대
 -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거부 이해충돌 직무 강행 시, 즉각 직무배제 및 벌칙 도입 등 공직자의 의도적 이해충돌방지 의무 회피 행위 처벌 강화
- 공익신고 절차 간소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법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

-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 폐지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 경찰국 폐지를 통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여성이 안전한 사회

-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범죄 대응체계 강화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 범죄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

- 흉악범죄·이상동기범죄(문지마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경력자 관리 감독 강화
- 청소년 범죄 대응체계 강화
- 음주관련 범죄근절
- 첨단 기술 악용 범죄 엄단
- 범죄예방특별법 제정

▶ 경찰 치안활동 강화 및 지원

- 흉악범죄 통계 작성 및 AI분석이 가능한 “문지마범죄(이상동기범죄)” 예방통계시스템 마련
- 경찰이 흉악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방검복, 호신용 경봉 등 지급 확대
- 경찰의 현장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 예산 확대

▶ 민생침해범죄·금융범죄 발본색원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 민생파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 보이스피싱·다중사기범죄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한 범죄이익 몰수 의무화
-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2배 상향 (현재 2천만 원 이하)
- 불법리딩방 등 지능화·복잡화되는 미등록 영업·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규율 강화
- 사기 의심계좌 지급정지 가이드라인 등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반복되는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

-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자 등에 대한 엄정처벌 원칙 견지
- 금융보안 확보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 도입
- 은행의 단기 실적주의 근절

▶ 국민안전 보장 및 사회재난 효과적 대응 위한 법령 제정

- 증가하는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재난관리·대응 법령 제정
 - 사회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의 사전 관리방안 마련 및 대응 의무 부여, 정부 부처별 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 마련
 -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 즉시 설치

▶ 기술탈취 무용납

-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망한다”는 대원칙으로 입법과 정책집행 및 사회분위기 조성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 도입

▶ 먹튀·시세조종 근절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상장법인 임직원 · 주요주주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하도록 의무화
- 사기·횡령·배임 등 상장법인 임원의 중요 전과기록 의무공시 단계적 확대
-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사모펀드(PEF) 투자조합 유한책임투자자(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 검토
-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여 투자자 피해구제 강화

▶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 복원

-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 및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 전세사기 예방 위한 관련법 재정비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시사점

- **사법개혁 관련**: 새 정부에서는 재판연구원 선발 확대,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을 통한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 대법관 증원, 전원합의체 변론공개 등을 통한 ‘상고심 재판의 신뢰 회복’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연구원 선발 확대,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분쟁 처리의 속도를 높여 소송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개인정보나 기업 내부정보의 유출 우려에 대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됨으로 인하여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증원할 대법관의 수에 따른 대법원 심리구조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어 그 입법과정에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방대한 양의 상고사건 접수로 인하여 충분한 심리·심사 없이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 대한 우려와 재판지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법관 수 증원은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를 감소시켜 보다 신속, 충실한 상고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단순한 대법관 증원만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심 제도에 관한 본질적 개편도 입법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민생 경제 침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민생경제침해사범, 즉,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다단계 사기 등에 대해서는 범정부 수사 기구 출범 등을 통하여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고, 이러한 범죄로 취득한 이익의 환수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술탈취범죄, 금융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AI 등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탈취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해외 기술 유출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본주의의 꽃인 건전한 주식시장 조성을 위하여 금융시장 교란사범, 특히, 주가조작범이나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범에 대한 대응체계 (금감원, 금융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여성, 아동에 대한 문지마범죄 예방**: 여성이나 아동을 상대로 한 흉악범죄, 문지마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력 강화와 유사 범죄경력자 관리 감독 강화 및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이 입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사절차·구조 개편**: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전제로 한 '검찰개혁' 추진으로 검찰청을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경찰국을 폐지하고,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경찰위원회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신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의 신설도 예상됩니다. 법개정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직무와 관련한 의사교환 내용,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자료에 대한 압수가 금지되므로 보다 실효적인 변호·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EU 등 국가의 경우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철저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이를 전제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명문화되면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률환경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글로벌 기업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이 가능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 **변호사 공공성 강화**: 새 정부는 국선변호사 보수체계 제도화 및 조력 범위 확대,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변호사 징계권한을 별도의 독립위원회에 부여하는 등 변호사의 공공성 강화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공공성을 강조한 변호사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취약계층의 방어권 강화, 법률시장 윤리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에게는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법무역량 강화, 사회적 책임(ESG) 연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전문가(형사)



문무일 | 대표변호사

T. 02-316-4002

E. mimoon@shinkim.com



조주연 | 변호사

T. 02-316-1857

E. jyjo@shinkim.com



석동현 | 변호사

T. 02-316-1812

E. dhseok@shinkim.com



이재경 | 변호사

T. 02-316-4110

E. jkylee@shinkim.com

관련 전문가(사법)



배호근 | 변호사

T. 02-316-4006

E. hkbae@shinkim.com



이승수 | 변호사

T. 02-316-4341

E. sslee@shinkim.com



이승혁 | 변호사

T. 02-316-4235

E. shyulee@shinkim.com

13 환경/탄소중립

[Key Point]

-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으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
-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와 에너지 세제 도입 등으로 인해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 중요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 공약

▶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 기후위기에 따른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역량 강화
 - 탄소국경조정(CBAM)·RE100·ESG 경영 등 환경무역장벽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일자리 창출
 - 철강 등 탄소다배출 업종 및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역량 강화

▶ 최신 소방장비 도입 및 화재안전 장비 확충

- 인명구조 로봇 및 소방작전 드론 등 최첨단 소방장비 도입 개발·보급
- 이동식 수조,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보유 확대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같은 생활 속 화학참사를 ▲조기발견 ▲신속대응 ▲장기치료 할 지원체계마련
-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환경호르몬 같은 심각한 독성물질의 신속한 퇴출 추진
- 산업단지 주변 발생 악취의 독성물질 함유 확인과 배출물질 관리·감독 강화 추진
- 불법유통 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진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 인체 유해 화학물질 유통 관리 강화

▶ ‘환경영향평가제도’ 획기적 개선

-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추진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 산정 현실화와 부당한 대행비 지급 금지
- 환경영향평가에 신기술 도입으로 접근성·신뢰성·객관성 제고

▶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및 탄소중립 산업으로의 전환

- 탄소 감축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추진
-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대전환 지속 추진
-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으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
- 탄소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실현

- RE100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 재생에너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리 기업의 RE100 역량 강화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제정

▶ 脫 플라스틱 정책, 탄소저장고 프로젝트

- 투명페트병 보증금제 도입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은 활성화하고, 페트병 생산을 줄여서 탄소중립에 기여
- 자원순환경제 선진화를 통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대책 마련
- 일정량 이상 플라스틱원료 사용 사업자 재생플라스틱 의무사용 제도 강화

▶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 통합인허가사업장 관리 강화로 2029년까지 $13\mu\text{g}/\text{m}^3$ 수준 달성

-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암모니아(NH3) 관리 강화 대책추진
- 석탄발전소 2040년 폐쇄 및 전환 추진
- 친환경 혁신적 교통·수송 분야 전환 정책 추진

▶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과 수질개선 강력 추진

- 4대강 유입산단폐수(낙동강), 미량유해화학물질과 축산폐수에 먹는물 처리방식 (오존, 활성탄)을 적용하여 오염물질 대폭 차단 추진
- 수질측정센터 4대강 전체로 확대

▶ 국제적 수준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추진

- 습지 탄소흡수원 국제(IPCC)인증 추진

시사점

- **탄소중립정책 지속 시행:** 세계 각국의 정부는 2030 NDC 달성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탄소중립 정책에 당분간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여기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따른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 새 정부는 지속가능성장을 초점으로 에너지 정책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업들은 에너지 전환과 비용 구조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정책 변화를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방안전기준 관리 강화:** 새 정부는 KFI(형식인증), KFAC(소방장비인증) 등의 소방용품 품질 및 생산체계 인증제도를 합리화하여 최신 소방장비 도입 및 화재 안전 장비 확충을 추진하는 등 화재·폭발사고의 예방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소방용품 제조업체, 소방용품 이용 업체 등은 정책 변화 내용을 모니터링하면서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잦아지는 산업현장의 화재, 폭발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소방관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건물,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소방 안전기준 준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화학물질 관리 강화:** 새 정부는 다양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반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신고, 등록의무, 취급기준 준수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사업장의 규제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발생 위험요인을 최소화 및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새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를 도입하여 사업자가 평가대행자에게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발생하는 대행업체의 예측 문제, 대행업체의 거짓·부실 보고서 작성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는 사업자가 공탁금을 예치하고, 공신력 있는 제3의 환경전문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사업자가 대행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다소 비용과 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 제거 및 간소화, 비용 상한 제한, 기한의 불확실성 축소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탈플라스틱 정책 강화:**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감축 규제 강화 흐름 속에, 새 정부 역시도 이와 관련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재사용,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미세먼지 저감 정책 강화:** 새 정부는 환경오염시설법상 통합허가 대상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현행보다 다소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통합허가 대상사업장에 부여된 허가조건 등의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오염시설법상 허가조건 위반에 대해 경우에 따라 10일에서 수개월의 조업정지까지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들은 대기 관련 허가조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 컴플라이언스 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환경/탄소중립)



이용우 | 대표변호사
T. 02-316-4007
E. ywlee@shinkim.com



백규석 | 고문
T. 02-316-4207
E. gsbaek@shinkim.com



이상욱 | 변호사
T. 02-316-4538
E. swlee@shinkim.com



김기용 | 수석전문위원
T. 02-316-4496
E. gykim@shinkim.com

14 ESG

[Key Point]

-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부터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단계적 확대 예정이기에, ESG 성과 보고를 위한 역량 및 내부 통제 체계 구축 필요
- ESG 정보의 신뢰성 높이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ESG 위싱 방지, 공시 인프라 개선 등에 따라 기업·투자자의 ESG 성과 공개 및 투자 활동 강화 필요

주요 공약

▶ ESG 경영이 확산되도록 지원

- 국민펀드 등을 활용한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및 기후기술 설비에 대한 자본 공급 확대
 - 중소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지원 강화
- 공적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범위 등을 확대하여 책임 있는 투자 유도
 - 수탁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결과 공시
- ESG 공시·측정·평가 인프라 제고
 - 한국적 상황·산업별 특징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ESG 평가체계 구축
 - 무늬만 녹색인 ESG위싱에 대한 규율 강화
-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신속 추진
- 기업의 기후공시를 강화하는 'Say on Climate' 순차 도입
 - 기후위기 대응계획, 감축목표, 이행 현황 등을 주주총회에서 표결대상 안건으로 상정

▶ 공공기관의 선도적 ESG 경영 지원

- 공공기관의 ESG 경영 평가를 강화하여 공공기관 경영의 공공성 강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평가위원의 전문성·독립성을 확보·강화
- 공공기관 맞춤형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ESG 평가 체계 도입
- ESG 평가에 공공기관 공통으로 적용될 사안에 대한 최소 통과 기준 도입
- 정책금융기관의 ESG 경영 우수 기업 투자 활성화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대출, 보증 시 대상 기업의 ESG 성과 반영하여 우수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비중 확대
-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 법」(가칭) 제정
 - 기업이 ESG 평가 체계 구축 및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컨설팅 지원
 - ESG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우대

▶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무역구조 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준비

- 기후위기에 따른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역량 강화
 - 탄소국경조정(CBAM)·RE100·ESG 경영 등 환경무역장벽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일자리 창출
 - 철강 등 탄소다배출 업종 및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역량 강화

▶ 글로벌 환경에 강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추진

- 중소기업 ESG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소기업 전분야 ESG 맞춤형 지원 확대
 - ESG 대응력 향상을 위해 「준비→진단→이행」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
 - 탄소중립 추진계획, 온실가스감축목표 및 기반구축, 에너지전환·친환경 설비 교체
 - 탄소감축 지원사업, 업종별 공동 R&D, 세제혜택 등 도입

시사점

- **상장회사 지속가능성 공시 조기 의무화:** 새 정부에서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의 신속한 추진이 예상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마련하고 있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도입과 함께, 상장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의 적용 범위와 추진 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은 ESG 성과 공시를 위한 공시 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ESG 성과 보고를 위한 역량 및 거버넌스 구축,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투자사들의 신뢰성 있는 ESG 정보 유통 제고:** 자본시장에서 ESG 및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실화와 ESG 정보에 대한 측정, 평가, 공시 인프라 제고, ESG 워싱 방지 정책 강화는 신뢰성 있는 ESG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투자사들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ESG를 고려한 투자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들은 ESG 성과를 높이고 신뢰성 있게 ESG 성과를 공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 경쟁력과 ESG경영 연계 강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ESG 경영이 필수적입니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과 단계별 지원체계를 통해 ESG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탄소 관리 역량의 증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자가진단, 맞춤형 컨설팅, 자금·R&D 연계 등의 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ESG 실행 기반(책임자 지정, 공시 대응, 데이터 관리 등) 활동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공기관 ESG 평가 기준 강화:**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특성에 맞춘 ESG 평가기준 마련, 기관 공통 적용되는 ESG 평가 기준도 함께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사업모델에 맞는 ESG 경영 추진과 함께 ESG 성과 공개 및 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및 보고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관련 전문가(ESG)



송수영 | 변호사

T. 02-316-1636

E. sysong@shinkim.com



정유성 | 변호사

T. 02-316-4425

E. yschung@shinkim.com



정영일 | 수석전문위원

T. 02-316-4317

E. yichoung@shinkim.com

15 국제통상

[Key Point]

-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하기 보다는 제반환경을 재평가한 후 대응할 것으로 전망
- 공급망 안정화 및 불공정 무역행위 규제 정책의 확대와 함께, 제3지대 구축을 위한 CPTPP 가입 논의 재점화 가능

주요 공약

▶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외교 추진

-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에 대응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체제 구축 추진
- 양자·소다자 경제안보 대화체, IPEF 공급망협정 등을 활용하여 주요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
- 민관 공동 경제안보 점검회의(가칭)를 정례화하여 상시 공동 대응체계 구축

▶ 국익중심 실용외교 및 외교영역 확대

- (미국) 호혜적 관계에 기반하여 전방위 협력 강화 및 관세, 방위비 분담 등 트럼프 행정부 현안 타결에 적극 대응
- (일본)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 한·미·일 협력 강화
- (중국)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지속, 한중일 협력 체제 정례화
- (러시아) 한러 관계 안정적 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기업의 권익 보호
- (EU·유럽) 개방적 글로벌 통상체계 확립을 위한 협력 모색 및 기후, 첨단기술, 인프라, 인권, 사이버안보 등 실질 협력 확대
- (Global South) 신남방·신북방정책 승계 발전, 인도와의 특별 동반자 관계 심화, 아세안·중앙아시아·중동·오세아니아 등과의 권역별 지역협력 강화

▶ 전략적 대응과 무역구조 혁신을 통한 수출 1조 달러 시대 준비

- 수출시장·수출품목 다변화, 기술·부가가치 중심으로의 무역구조 전환 등을 통한 특정국 수출의존도 축소 및 중장기 수출 경쟁력 확보
- 탄소국경조정(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강화
-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내수 강소·중견기업 수출기업화 추진
- 국내산업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다자·양자 FTA 지속 확대 및 대미 투자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방위 총력 지원
- 양자·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핵심소재·광물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추진

▶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지원을 위한 세제 도입

- 국가전략 첨단제품을 국내 생산·판매시, 생산량·판매량에 비례하는 법인세 공제(일정 요건 충족시 공제 세액의 일부 현금 환급도 검토)

시사점

● **對美 관세협상:**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품목관세(자동차·철강·알루미늄 232 조치)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관세협상은 새 정부의 당면과제 중 하나입니다. 다만, 미중간 90일 관세 부과 유예 합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미국 국내법원 판결(항소심 진행 중), 미국의 양자협상 결과 부진(영국과의 합의(5.8일)가 유일) 등을 고려할 때, 협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은 보인 바 있어 새 정부에서는 기존 협상 내용과 변화된 협상 환경, 여타국들의 대응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무역협정:** 공약집에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간 무역협정체제 구축과 함께 FTA 지속 확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최근 WTO의 규범력 약화, 미국·EU·아세안·인도 등 주요국과 FTA 체결 완료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가입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PTPP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고 CPTPP에 가입하는 경우 높은 수준의 무역규범과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전례 없는 전방위적 관세정책과 미중간 무역·기술 경쟁 심화 등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CPTPP가 안정적인 무역규범이 보장되는 제3 지대로서,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최근 EU도 내부적으로 CPTPP 가입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새 정부에서 논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2012년 공식 협상이 개시된 후 2019년 제16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한중일 FTA의 경우, 최근 협상 재개 움직임이 있긴 하나 3국간 산업별로 경쟁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빠른 시일 내 협상 타결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보다는 협상을 재개하여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급망**: 안정적인 공급망(GVC) 구축은 경제안보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도 공급망 교란으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승계, Global South와의 권역별 협력 강화, MSP와 IPEF 공급망협정 등을 활용한 주요국과의 연대 강화, 핵심소재·광물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새 정부에서 정례화될 민관 공동 경제안보 점검회의(참석자에 경제 4단체장 포함)를 통해 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 **무역 집행 강화**: 수입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상계관세 부과 및 기타 관세·규제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제3국 기업에 의해, 또는 제3국 제품의 수출 과정에서 한국을 중간지대로 악용(예: 한국에서 경미한 추가 공정 후 한국산 제품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회수출은 한국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우회수출을 실효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한국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규제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규제 대상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새 정부는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첨단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 생산량·판매량에 비례하여 법인세를 공제하는 세제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같이, 국내기업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산업의 기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대상제품 선정 기준, 세제 혜택 수준 및 제공 방식 등에 따라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만큼 향후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국제통상)



박영석 | 변호사

T. 02-316-4465

E. youngsukpark@shinkim.com



윤영원 | 변호사

T. 02-316-1628

E. ywyoon@shinkim.com



김재희 | 변호사

T. 02-316-1767

E. jheekim@shinkim.com



장미화 | 전문위원

T. 02-316-4461

E. mhchang@shinkim.com

16 소비재/유통

[Key Point]

- 탈 플라스틱 정책의 강화로 인해 친환경 포장재, 재생플라스틱 등의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 창출될 것으로 예상
- 가맹점주,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자에 대한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로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가 예상됨

주요 공약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 법제 구축
 -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 도입
 -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피해 방지법 도입으로,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경쟁 촉진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혁신 재창출
 -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 재정비

▶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의 선도국

-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보호 수준 제고
 -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 및 이용자 신고·처리 제도 도입
 - 디지털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조치, 정부 보고, 장애 원인 고지 등 의무화
 - 국가적 참사, 사회 재난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 명예 보호
 -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제재 수준 강화
-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
 -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 개선, 공정한 망 이용 계약 제도화
-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으로 앱 마켓 글로벌 형평성 제고
 -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 등

▶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구입 강요, 차별가격 적용 등을 통한 비용 전가 방지
 -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의 단체 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로 합리적인 거래계약 유도
 - 열위적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상권 부여

▶ 모두가 행복한 배달 문화 구축

-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
 -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 방통위, 공정위로 산재된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 정비
- 배달 종사자 처우 개선, 안전 배달문화 조성
 - 배달 종사자에 대한 유상운송보험 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등 사회안전망 조치 강화
- 플라스틱 사용 저감대책 마련
 - 친환경 포장재 또는 다회용기 사용제도 도입 추진

▶ 탈 플라스틱 정책과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저장고 프로젝트 추진

- 투명페트병 보증금제 도입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은 활성화하고, 페트병 생산을 줄여서 탄소중립에 기여
- 일정량 이상 플라스틱 원료 사용 사업자 재생플라스틱 의무사용 제도 강화

시사점

-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및 책임 강화:** 새 정부는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의 상한 도입, 사업자 간 수수료율 차별 금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 등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탈 플라스틱 정책 강화**: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하여 재생원료를 3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에 있는 등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감축 규제 강화 흐름 속에, 새 정부 역시도 이와 관련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재사용,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소비재/유통)



장철준 (Anthony Chang) | 외국변호사

T. 02-316-4258

E. achang@shinkim.com



이혜정 | 변호사

T. 02-316-1719

E. hjelee@shinkim.com

17 지적재산권

[Key Point]

-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신속 차단 및 수사 공조 강화로 국내 저작권 보호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기술탈취 입증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한 새로운 증거수집제도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다룰 회사 내부조직 및 매뉴얼 마련할 필요

주요 공약

- ▶ **딥테크, 핀테크 등 혁신분야 유니콘 기업의 창업, 성장, 투자 단계에서 지원 제공**
- ▶ **콘텐츠 신성장·원천기술 지원 확대, 콘텐츠 분야 세제지원 확대, 콘텐츠 재투자 목적인 경우 환급형 인센티브 지원, 새로운 창작환경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 불법 유통의 신속 차단 및 해외 수사 공조 강화**
- ▶ **기술탈취 대응을 위하여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를 도입**

시사점

- **딥테크, 핀테크 등 지원:** 딥테크, 핀테크 등 혁신분야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성장펀드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분야 사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원의 대상이 되는 범위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초기 법인의 설립과 영업분야의 설정 등의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류 콘텐츠 산업 지원**: 음악, 웹툰,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작 지원 및 세제 혜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텐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의 범위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초기 법인의 설립과 영업분야의 설정 등의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불법 저작물 유통에 대한 신속 대응**: 해외에 서버를 둔 채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신속한 접속 차단 조치 및 해외 수사 공조를 강화하여, 국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에도 해외 수사 공조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만 실효적으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사업자의 경우, 구체적인 제도의 방향 및 활용 방법을 주시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콘텐츠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 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현행 증거제도인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신청만으로는 대상기술 관련 문서나 침해행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 및 상대방에 편재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보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특허소송에 새로운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면, 증거수집을 명목으로 사무실 등 영업시설이나 전산시스템에 대한 강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조사자측 영업비밀 내지 비밀정보가 소송 목적과 무관하게 유출되거나 이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바, 향후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러한 위험성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도화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제도의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 내부적인 조직 및 매뉴얼을 준비해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전문가(지적재산권)



임보경 | 변호사

T. 02-316-4041

E. bklim@shinkim.com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18 컴플라이언스

[Key Point]

- 대선 기간 후보간 공약에 특별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없었으나, 향후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요성 더욱 높아질 가능성 존재

주요 공약

▶ (향후 추이 지켜볼 필요)

시사점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고도화 및 교육의 필요성**: 금번 대선 기간 후보들의 공약상에 특별히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여 법률 리스크를 방지하거나 준법경영을 할 필요성이 줄어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각 분야별로 새롭게 도입된 내용이나 향후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발표될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교육을 통해 사내에 두루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i) AI, 플랫폼, 빅데이터, 가상자산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규제나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분야(AI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하여 2024. 9. 개정된 미국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지침’과 같은 내용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 (ii) 공정거래, 상생협력, 정보보안, 노동, 중대재해,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경우 새로운 정책의 내용을 반영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업데이트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24. 6.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같이 제대로 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새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규제 및 정책 동향에 대하여 촉각을 기울이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전문가(컴플라이언스)



문무일 | 대표변호사

T. 02-316-4002

E. mimoon@shinkim.com



최성진 | 변호사

T. 02-316-4405

E. sjinchoi@shinkim.com



석근배 | 변호사

T. 02-316-4640

E. gbseok@shinkim.com



박인규 | 수석전문위원

T. 02-316-1708

E. igpark@shinkim.com

19 방산/국방

[Key Point]

- 범정부적 방산산업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해질 것
- 국방 R&D분야 투자 확대 예상되면서도, 지식재산권 귀속, 이전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 등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

주요 공약

▶ 국민을 위한 군으로의 개혁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문민화 점진적 확대
- 군 교육기관 통합추진

▶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한 군체계 확립

- 국방 AI 기술투자 확대 통한 국방운영 효율성 향상
- 해병대를 독립, 준4군 체제로 개편
-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 EU 및 유럽지역과의 실질 협력 강화

- 사이버안보, 방산 등 이슈 실질 협력 확대

▶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발전

- 호혜적 관계에 기반해 군사, 첨단 과학기술 등 전방위적인 협력수준 강화
- 군사 및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보공유, 인적교류, 공동연구개발 등 실질협력 지속강화

▶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

▶ 중장기적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추진, 한반도 24시간 감시 ‘군사’ 위성체계 구축,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G4)

-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 직위 경제수석실로 이관,
 -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 조선분야 글로벌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팀 구성
- 국방 R&D 투자 확대로 국방 AI 첨단기술 기반 구축
- R&D 투자세액 감면 및 방산 지원 정책 펀드 확대 등 방산 수출기업 지원 확대
-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 소요 및 시험평가 등 방위사업 추진 체계 간소화
 - 국방과학연구소 원천기술의 민간 이전 확대
 - 업체간 경쟁 지양, 수출경쟁력 확보 위한 사업조정제도 도입
 - 방산업체로부터 신개념 무기체계 또는 사업추진전략 제안받는 'Innovation Mining' 제도 도입

시사점

● **법정부적 지원 강화**: 새 정부의 방산 관련 정책은 ‘정부주도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는 방위산업을 우리 경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신성장 동력으로 규정하며 법정부적 지원체계 강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관의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을 경제수석실로 이관하여 금융을 통한 수출지원, 세제지원 등 보다 폭넓은 방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할 예정입니다.

방산기업들로서는 G2G로 추진되는 방산 수출의 특성상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방산수출에 보다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구체화될 금융, 세제지원 등 새로운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각종 정책과 혜택들을 살펴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새 정부는 ①복잡한 방위사업추진 체계를 간소화하고, ②국방과학연구소 원천기술의 민간 이전 확대를 추진하며, ③업체간 과다한 경쟁을 지양하고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업조정제도는 방사청 개청과 함께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를 통해 업체간 자유경쟁에 맡겨왔던 방위산업에 다시 국가의 조정·개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개별 사업 추진과 결정에 있어 방위사업청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국내경쟁 지양·수출경쟁력 확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체간 기술력 차이, 자유시장질서에 따른 시장경쟁원리가 아닌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 참여나 범위에 제한이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조정제도 도입, 법제화 과정에서 제도 도입의 취지는 살리되 방산업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방R&D 국가투자 확대:** 새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R&D예산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AI 첨단 기술 등 방산 R&D분야에서의 국가투자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국방기술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한 ‘Innovation Mining’은 방사청의 ‘신속시범사업’(기존 신속시범획득사업과 신속연구개발사업을 통합)과 함께 민군기술협력에서의 Spin-on(민간기술의 국방기술로의 이전)과 Spin-up(국방과 민간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거나 제조)을 더욱 활성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들의 자체 R&D투자는 물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과의 협력 또는 M&A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방 R&D의 경우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달리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소유와 실시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고,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이에 대한 업체간 다툼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 R&D 연구개발계약 또는 협약체결시 지식재산권 관련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아가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실시, 기술료 지급 등 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는 방산수출시에 문제되고 있는바, 방산업체들은 개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검토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미 방산 수출·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 새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발전을 표방하고 있고 방산 분야에서도 조선, 무기체계 등 미국과의 협업 및 대미수출 증대가 기대됩니다. 한편 올해부터 미국 국방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제도인 CMMC(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사이버 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가 실시됨에 따라 미국 사업을 추진하려는 업체들은 CMMC 인증 획득이 반드시 필요하고 미국과의 국방 협력 강화를 위하여는 CMMC 인증 역량이 필수적이거나, 아직 이에 대한 대비나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등 국내 업체 지원, 한미 정부간 CMMC 상호인증 협정 등 업체와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방산/국방팀은 방산수출, 연구개발, 구매 등 방위산업 관련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산정책과 관련해 기업·금융·국제통상·지식재산권은 물론 산업기술·보안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외 업체들에게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방산/국방)



조인형 | 변호사

T. 02-316-1615

E. ihcho@shinkim.com



박형기 | 변호사

T. 02-316-1853

E. hgipark@shinkim.com

입법전략자문그룹



노대래 | 고문

T. 02-316-4619

E. dlnoh@shinkim.com



장대섭 | 고문

T. 02-316-4639

E. dsjang@shinkim.com



윤강현 | 고문

T. 02-316-4322

E. khyun@shinkim.com



백대용 |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김성범 |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안현정 |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김광재 | 변호사

T. 02-316-1624

E. kjakim@shinkim.com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